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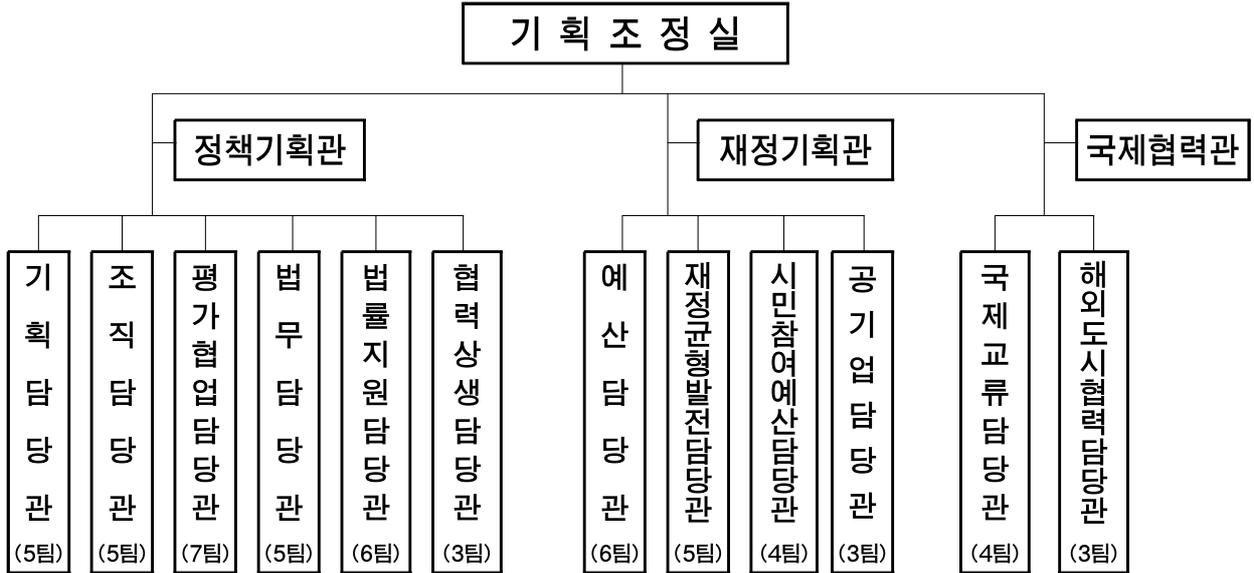
주요 업무 보고

2019. 2.

기획조정실

I. 일반 현황

조 직 1실, 3관, 12담당관, 56팀, 1직속기관 · 1출연기관



- 직속기관 : 시립대학교(8대학 10대학원 6처)
- 출연기관 : 서울연구원(1본부 6연구실 3센터)

인 력 309/292명(정원/현원)

(’19. 2. 11. 현재)

구 분	합 계	일반직	임기제	별정직	관리운영직
계	309/292 (161)	257/242	44/41	1/1	7/8
기 획 담 당 관	39/35 (13)	31/28	6/6		2/1
조 직 담 당 관	33/32 (20)	31/31	1/1		1/
평 가 협 업 담 당 관	35/34 (20)	33/32	1/1		1/1
법 무 담 당 관	24/24 (14)	22/22	1/1		1/1
법 률 지 원 담 당 관	28/27 (16)	13/12	15/14		/1
협 력 상 생 담 당 관	17/16 (6)	14/13	3/2		/1
예 산 담 당 관	40/37 (16)	38/35	1/1		1/1
재 정 균 형 발 전 담 당 관	21/21 (10)	20/20	1/1		
시 민 참 여 예 산 담 당 관	12/11 (8)	11/10	1/1		
공 기 업 담 당 관	17/15 (8)	15/14	2/1		
국 제 교 류 담 당 관	27/24 (16)	17/14	8/8	1/1	1/1
해 외 도 시 협 력 담 당 관	16/16 (14)	12/11	4/4		1

※ 괄호 안은 부서별 여성공무원수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기 획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정현안사항 기획·조정 ○ 시의회 관련 업무, 국정감사 수감총괄, 공약총괄 관리 등
조 직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민간위탁 업무 ○ 지방분권 업무 및 학술용역심의
평가협업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 주요사업·시책 평가 및 협업 조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등
법 무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법규 제·개정, 규제개혁 ○ 행정심판, 소청심사 운영
법률지원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소송 수행, 법률자문, 계약서, 위·수탁 협약서 심사 ○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 및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
협력상생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상생 프로젝트 추진, 타 지자체와의 상생교류 협력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회·지자체 등 협력관련 업무 등
예 산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총괄, 예산집행 관리 총괄 ○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승인, 재정투융자기금 운용
재 정 균 형 발 전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산하기관 통합재정관리, 균형발전 총괄, 기금운용 총괄 ○ 재정투자심사, 지방보조금·국고보조금 총괄 등
시 민 참 여 예 산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관리 ○ 예산학교,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공 기 업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출연기관 설립지원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국제교류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외교 계획 수립, 국제교류 업무 총괄 조정 ○ 해외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협력 및 국제의전 지원
해 외 도 시 협 력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정책 해외공유 전략수립 및 조정·지원 총괄 ○ 국제기구 유치·협력사업 추진 및 국제회의 참가 등

예산 총 규모 : 2조 2,561억원

○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최종(사업수)	2019년 (사업수)	증 감
합 계	3,134,558 (78)	2,256,124 (80)	△878,434
일반회계	1,310,478 (63)	535,440 (63)	△775,038
도시개발특별회계	51,433 (-)	93,546 (-)	42,113
기금	1,772,647 (15)	1,627,138 (17)	△145,509

○ 일반회계 : 총 5,354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최종 (사업수)	2019년 (사업수)	증 감
합 계	1,310,478 (63)	535,440 (63)	△775,038
기획담당관	1,229 (3)	1,152 (3)	△77
조직담당관	88,685 (12)	86,865 (11)	△1,820
평가협업담당관	2,638 (6)	1,948 (5)	△690
법무담당관	661 (3)	778 (3)	117
법률지원담당관	5,824 (2)	5,731 (2)	△93
협력상생담당관	4,320 (6)	3,386 (4)	△934
예산담당관	324,777 (3)	225,731 (3)	△99,046
재정균형발전담당관	870,101 (6)	196,422 (11)	△673,679
시민참여예산담당관	630 (2)	756 (3)	126
공기업담당관	697 (4)	814 (4)	117
국제교류담당관	5,542 (7)	5,995 (7)	453
해외도시협력담당관	5,374 (9)	5,862 (7)	488

○ 도시개발특별회계 : 총 935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최종 (사업수)	2019년 (사업수)	증 감
예산담당관	51,433 (-)	93,546 (-)	42,113

○ 기금 : 총 1조 6,271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최종 (사업수)	2019년 계획(사업수)	증 감
합 계	1,772,647 (15)	1,627,138 (17)	△145,509
재정투융자기금	892,562 (-)	994,449 (-)	101,887
감채기금	864,761 (-)	619,188 (-)	△245,573
대외협력기금	14,410 (15)	12,453 (17)	△1,957
지역개발기금	914 (-)	1,048 (-)	134

※ 사업수는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등 제외

II. 정책 목표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

체계적 정책조정 및 시정성과 창출 기반조성

민 선 7 기
시 정 성 과
창 출
지 원

시 민 권 익
향 상 을
위 한
제 도 개 선

실 효 성 있 는
예 산 · 재 정
관 리 체 계
확 립

교 류 협 력 에
기 반 한
서울의 위상
제 고

Ⅲ.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민선7기 시정성과 창출 지원

- ① 시정의 주요 방향 설정 및 현안 발생 시 조정 역할 강화
- ② 민주적 시정 구현을 위한 의회와의 정책소통 활성화
- ③ 실효적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제도별 대응에 역량 집중
- ④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위탁 효율화
- ⑤ 시정 지속가능발전 실행력 확보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 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 ②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강화
- ③ 자치법규의 적기 정비를 통한 시정의 법적 안정성 확보
- ④ 대시민 법률서비스 지원 강화

3. 실효성 있는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 ① 재정건전성과 확대재정이 양립하는 채무관리계획 수립
- ②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 추진
- ③ 2019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운영
- ④ 2019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 ⑤ 투자·출연기관 윤리경영 강화

4. 교류협력에 기반한 서울의 위상 제고

- ① 지방-서울간 정책 교류를 위한 찾아가는 혁신로드 운영
- ② 지역 수요 맞춤형 우호교류협약 체결 추진
- ③ 글로벌 리딩 도시 위상 강화를 위한 전략적 도시외교 추진
- ④ 우수정책수출 및 국제기구 유치로 서울의 국제적 위상 강화

1. 민선7기 시정성과 창출 지원

① 시정의 주요 방향 설정 및 현안 발생 시 조정 역할 강화

② 민주적 시정 구현을 위한 의회와의 정책소통 활성화

③ 실효적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제도별 대응에 역량 집중

④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위탁 효율화

⑤ 시정 지속가능발전 실행력 확보

1 시정의 주요 방향 설정 및 현안 발생 시 조정 역할 강화

시정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현안 발생시 정책간 조정 및 부서간 협업을 지원하는 시정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

□ 추진 방향

- 시정의 철학과 가치를 담은 중장기 시정 마스터 플랜 기획·수립
- 주요 정책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부서간 칸막이 해소 및 소통·협력 지원
- 현안발생시 긴급회의 소집과 시정자원 적기 투입으로 의사결정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

□ '19년 추진 계획

- 민선7기 시정철학을 충실히 반영한 중장기 시정 운영계획 수립·관리
 - 최상위 계획인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으로 시정 운영방향 제시
 - 공약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을 통해 대시민 공약 실천(메니페스토) 지원
 - ※ “더깊은변화위원회” 운영을 통해 민선7기 7개 정책목표, 230여 개 공약사업 조정
- 실·본부·국간 정책 조정을 통해 주요시책에 대한 실·본부·국의 협치 지원
 - 정례·수시 회의체(정례간부회의 등) 운영을 통해 관련부서간 소통 및 협업 유도
 - ※ 수시회의: 경제활성화 점검회의, 공정관리 점검회의 등
 - 소관 불분명 업무는 총괄 및 협조부서 지정으로 명확한 역할분담 부여
 - ※ 민선 7기 시정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조정회의 실시 예정
- 긴급한 현안 발생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적시성 있는 상황 전파와 긴급현안 회의소집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 조직·예산·인력 등 시정자원의 적재적소 투입으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주요 컨트롤 타워 기능]

중장기	상 시	긴 급
시정철학 반영 시정운영계획 수립·관리	부서간 정책조정으로 시책 적기추진	현안발생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2

민주적 시정 구현을 위한 의회와의 정책소통 활성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한층 강화된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로, 천만 시민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 책임시정 구현

□ 추진 방향

-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간담회, 시장-의회 상임위원 간담회 등 시장단과 시의원간 정기·수시 소통으로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협치 지속 추진
-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언론발표 및 시장 행사 추진 시, 시의회 사전설명 및 원활한 정보 공유로 의회와 집행부 간 동반자적 관계 강화

□ '19년 추진 계획

① 정기·수시 소통활동 지속 추진

- (수시소통) 집행부-시의회간 소통 및 스킨십을 위한 시장-시의회 상임위원 간담회 개최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시 업무협의 추진
- (정기소통) 회기 개최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와 안건의 사전 설명을 위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간담회 개최 정례화
- (현장소통) 민생과 현장에 정통한 의원들과 지역 현안 공유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 행사나 회의 시 적극 안내하여 대화·소통 채널 마련

② 의회와 원활한 정보공유 활동 강화

- (정보공유) 기자설명회 및 언론보도자료 배포시 소관 부서에서 소관 상임위, 의장단, 관련 지역 시의원 등에게 공유 및 사전 설명 의무화
- (요구자료 개선)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의 안착을 통해 요구자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실·국 의회담당직원 직무교육 강화 등 노력 경주

3

실효적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제도별 대응에 역량 집중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및 지방자치법 개정 등 각종 분권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에 맞는 지방분권 확립을 위하여 제도별 대응방안 마련 추진

□ 중앙정부 동향

- (자치조직권) '지방자치법' 개정안 법제심사(∼'19.3) 및 '기구정원규정' 개정안 의견조회('19.1)
- (재정분권) 지방소비세율 인상(4%p, '18.12)에 따른 정부보조(균특회계) 축소 추진('19. 상반기)
- (사무이양) '지방이양일괄법' 국회 제출('18.11) 및 상임위별 검토 중(∼'19.2)
- (자치경찰)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법제화 방안 발표(당정청 협의회 시, '19.2.14)
 -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 인력(총 4만3천명) 및 사무이관(주민생활안전 사무) 등

< '18~'19년 우리시 추진 현황(실적) >

- ▶ **시의회와 협력**하여 정부 분권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응 적극 추진**
 - 자치분권위원회 서울 현장간담회('18.11) : 자치재정·조직권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등 공동건의
 - 지방분권 릴레이 토론회('18.10) : 지방의회 등 4개분야 토론(자치제도, 자치경찰, 재정분권, 지방의회)
- ▶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후속조치 관련 **법령·제도 개선 지속 건의**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행·재정 지원병행 촉구 : 국무회의('18.10), 시도협 국회건의('19.1)
 - 3급이상 기구수 및 부단체장 정수 확대 등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보장 : 시도협 의견서 발표('19.1)
 - 기타 행안부장관·차관면담, 차관회의, 간담회 등에서 분권관련 시 의견 적극 건의(총13회)
- ▶ **시 자치경찰 모델 발표**('18.2월) 및 '**자치경찰추진팀 신설**('18.7월)을 통한 선제적 대비
 - 정부안에 시 모델 반영 : 지구대·파출소 이관, 자치경찰 운영경비 국비부담원칙 등
- ▶ 「지방이양일괄개정법」(571건) 제정 대비 **실질적 권한이양, 행·재정 지원 요구**
 - 근로감독 및 임금체불 관리·감독, 임대차 증액한도 설정권 등 134건 추가 권한이양 요청(39건 반영)
- ▶ 각종 관련회의 및 토론회 개최, 지방분권 취지 확산 및 시민 공감대 형성
 -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서울회의('18.2),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개최('18.2월, 12월), 대학생 대상 토론회('18.3) 및 릴레이 토론회('18.10), 기획보도('18.10) 등

□ 추진 방향

- 자치경찰 등 올해 바뀌는 **분권정책별로 발빠르게 대응**하여 성공적인 제도 안착
- 분권 관련 **협력 네트워크와 공조** 및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분권'** 추진

□ '19년 추진 계획

① 자치경찰제 성공적 시범도입 등 주요 분권정책별 대응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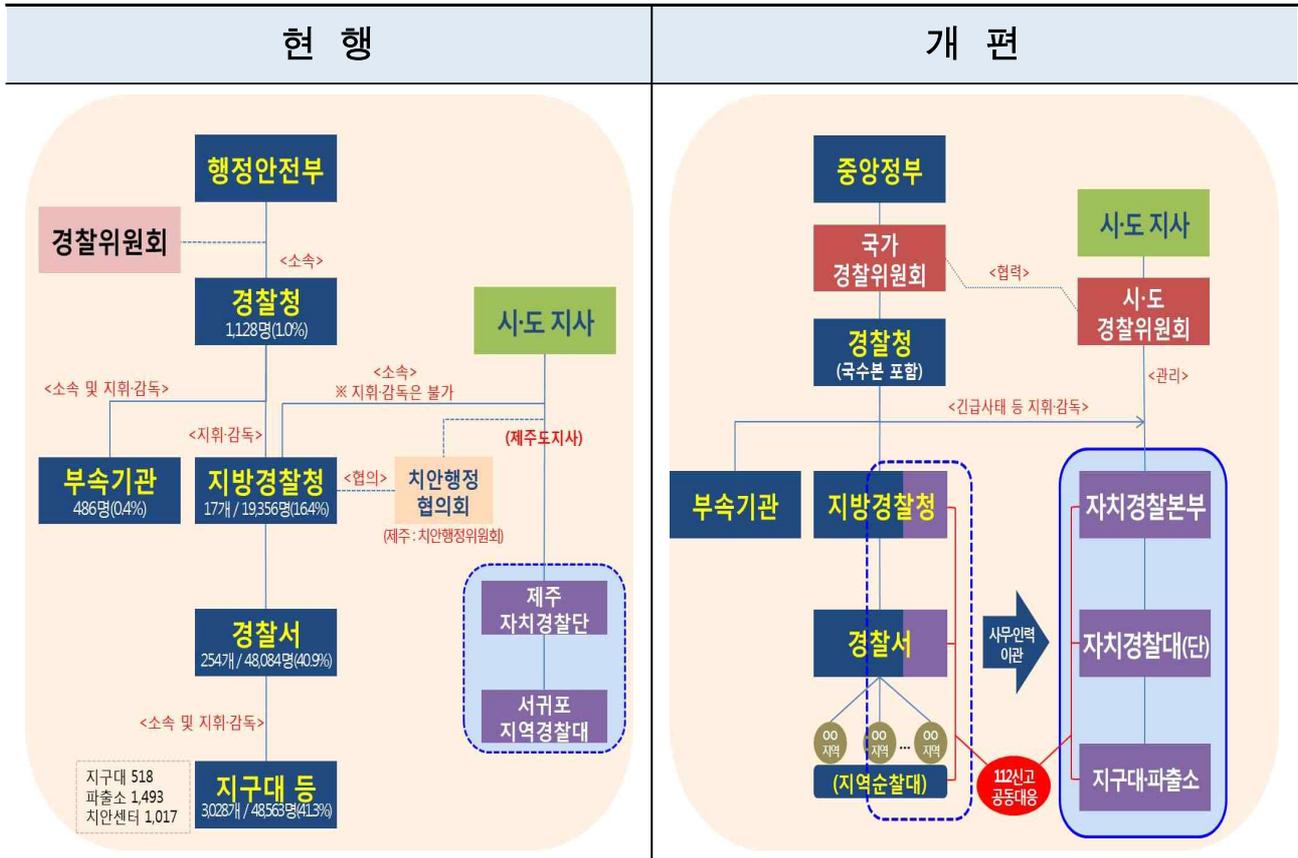
- **(자치조직권)** 지자체의 조직자율권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
 - － '지방자치법', '기구정원규정' 상 지방정부 조직권의 전면적 자율화 지속 요구
- **(재정분권)** 재정분권 확대 촉구 및 정부보조(균특회계) 축소 시 지방정부 참여 건의
 - － 정부 재정분권계획(지방소비세율 '19년 15%→'20년 21%로 인상 등) 확실한 이행촉구
 - － 균특회계 지방 이양시 지방정부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참여방안 마련 건의
- **(사무이양)** 지방이양일괄법 국회 통과 및 행·재정적 지원 병행 촉구
 - － 지방이양일괄법 국회 조속 통과, 지방이양비용평가위 구성시 지방정부의 참여 보장
 - － '사무이양 비용 및 행·재정적 지원방안 도출' 학술용역 추진 ('19.3~6, 한국지방세연구원)
- **(자치경찰)** 시범실시('19년 하반기 예상)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
 - －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도입방안' 연구용역 추진 ('19.1~4, 市 자치경찰 사무·권한 분석 등)
 - －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인력·재정·사무·공간 등 이관사항에 대한 사전 준비

② 대내·외 지방분권 네트워크와 협력체계 구축 등 공동대응

- **市-시의회-자치구-타 지자체**와 공조체계 강화하여 대정부·국회 대응
 - －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가입('19.1)으로 광역-기초간 공동대응체계 강화
 - －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정부간 협의체와 함께 국회·대정부 합동 방문 건의 등
- 지방분권 관련 **시민단체 및 학계**와 공동연대를 통한 분권 분위기 확산

③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장 마련으로 시민과 하나되는 지방분권 조성

- 전문가 위주에서 탈피, **시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주간'**(10.25~10.31) 행사 추진
 - － 시민참여행사(시민제작 동영상(UCC) 공모전 등) 추진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 공감대 형성



- **조직·인력** : 자치단체의 신규 인력증원 없이, 필요한 인력은 지역경찰·교통 등 국가경찰 ‘총 4만 3천명’ 수준을 ‘단계적’으로 이관, 자치경찰 신설(이원화 모형)
 - ※ 1단계 7~8,000명 → 2단계 30,000~35,000명 → 3단계 43,000명 → 최종단계 평가 후 추가 확대
 - 지역 밀착 부서인 ‘지구대·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 이관
- **정치적 중립** :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도경찰위원회’ 설치
 - 위원 5명 중 2명은 시·도의회에서 추천
- **사무배분** :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 수행
 - ※ 112신고 출동 및 현장 초동조치는 공동 대응, 업무혼선 및 국민불편 최소화
 -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건현장에 대한 현장보존 등 ‘초동조치권’ 부여
- **재정소요** : 초기 시행단계는 국가부담, 전국 확대 시 경찰 교부세 등 강구
 - ※ △신규 증원 없이 국가경찰 인력 이관 △시설·장비 등 공동 활용, 신규 재정부담 최소화

4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위탁 효율화

민간위탁사업의 공공성, 효율성의 조화를 도모하고, 시정 핵심가치를 민간영역으로 확산시키고자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 추진 방향

- **상생·협치** 기반 민간위탁 제도 구축으로 사업의 적실성·대응성 제고
- 불합리한 규정 개선을 통한 **안정적** 민간위탁 추진여건 마련
-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회계감사 통합실시로 민간위탁의 **투명성·공정성** 확대

□ 민간위탁 현황 : 총 383개 사업, 8,035억원 (19.2월 기준, 천/억원)

계		예산지원형						수익창출형	
		소 계		시 설		사 무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 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383	8,035	360 (94%)	8,009	248 (65%)	6,595	112 (29%)	1,414	23 (6%)	26

□ '18년 추진실적

- **(제도)**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표준협약서, 예산/회계/인사 매뉴얼 개정**(18.6.)
 - 근로기준법(주52시간) 개정에 따라 수탁기관 종사자 근로시간 준수 의무 명시
 - 성희롱·성폭력 피해발생시 협약해지 가능토록 표준협약서 개선
 - 종합성과평가 평가지표를 협약체결 단계에서 사전 확정토록 개선 등
- **(심의)**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개최 : 총 6회, 67건(산규18, 재계약48, 재위탁1)
 - 신규 위탁·재계약 적정성 심의결과 : 적정 52, 조건부 11, 부적정1, 보류1, 제외2
- **(회계)** 통합 회계감사 실시(18.3.) : 174개 사무
 - '18년 지적사항은 84건(48%)으로, 전년 99건(66%)대비 지적비율 감소
- **(평가)**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 : 총 3회, 44개 사무(평균 80.51점)
 - ※ 60점 미만 2개 사무(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녹색산업지원센터) 재계약 배제공모 추진

□ '19년 추진 계획

○ 협치정신에 기반한 민간위탁 제도개선 추진

- (지도·점검) 다양한 전문인력(회계사, 노무사, 변호사 등)을 활용한 컨설팅 추진
- (성과평가) 실질적 시민참여(심층인터뷰 등) 강화 및 사업부서 협치지원 노력 반영
- (협약체결) 기존 의무 중심 협약에서 경영자율성을 제고하는 수평적 협약으로 변경

○ 민간위탁 관리지침·매뉴얼 등 불합리한 절차·규정 보완

- 관행·경직적 예산편성 지양, 감사 지적사항 반영 등 회계 분야 불합리한 규정 개선
- 수탁기관에 대한 사전 검증 강화 및 부정비리 수탁기관 페널티 부여방안 마련

○ 민간위탁사무 통합 회계감사 확대 실시('18년 174개 → '19년 205개, 31개 증가)

-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사업부서 수요를 반영하여 205개 사무 통합 감사 추진
- 외부 회계감사인 선정하여 사업비 정산감사 실시, 사무별 감사결과 이력 관리 추진

감사 연도	'17년 (최초실시)	'18년	'19년
사무 수(개)	150	174	205

□ 향후 일정

- '19년 민간위탁 통합 회계감사 시행 : '19. 2~3월
 - 회계감사결과 토대로 사업부서·수탁기관 관계자 집합교육 실시(연 4회)
- 제도개선(안) 관련부서 협의 및 관계자 의견 수렴 : '19. 3~5월
 - 법률지원담당관·재무과 등 검토 및 민간위탁 거버넌스를 통한 의견수렴 실시
- 민간위탁 관리지침·매뉴얼 등 개정 추진 : '19. 6월
 - 표준협약서 개정, 민간위탁 추진절차 개선, 예산 회계 매뉴얼 보완 등

5 시정 지속가능발전 실행력 확보

시 주요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국내·외 도시 및 시민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균형있는 발전 도모

□ 추진 방향

- 전문가·시민참여로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시행
 -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분야별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는 실천적 과제 도출 및 시행
- 시정 주요사업 및 중·장기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평가

□ 추진 실적

- 사회·환경·경제의 통합적 관점에서 도시발전 기반구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13) 및 제1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15)
- 지속가능발전지표 수립('15.4.) 및 분야별 시범평가 실시('15.10.)
 - 경제·사회·환경 분야 30개 지표 대상으로 '20년 목표치 대비' 14년 달성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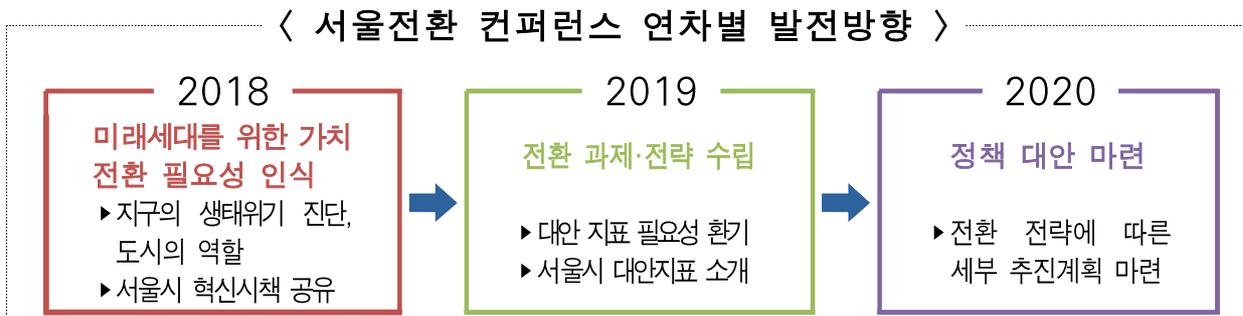
- 경제분야(10) : 고용률, 사회적경제기업 수, 제조업 종사자 수, 도시농업공간면적 등
- 사회분야(10) : 평생교육 참여율, 공공임대주택 수, 교통사고 사망자 수 등
- 환경분야(10) : 온실가스(CO₂)배출량, 1인당 공원면적,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등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수립('17. 1.)
- 2018 서울전환컨퍼런스 개최('18.10.)
 - 주 제 : 문명전환과 도시의 실험
 - 참 석 : 데이비드 코튼(前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 시민 등 400여명
 - 주요내용 : 문명전환과 도시의 과제, 전환도시 서울의 도전과 실험 등 논의
- 2019 글로벌 지속가능발전포럼('19. 2.)
 - 주 제 : 인권 신장과 번영의 공유
 - 참 석 : 세바스티안 쿠르츠(오스트리아 총리) 등 약 1,000명
 - 주요내용 : 인권, 보건, 균등, 남북협력 등의 논의를 통한 지속가능성 모색

□ '19년 추진 계획

○ 2019 서울전환컨퍼런스 추진(안)

- 일시/장소 : '19년 9월 26일~27일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 주 제 : 생태 전환을 위한 도시의 실천적 해법 모색
- 참 석 :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 저명인사 20여명 외 시민 300명
- 주요 내용 : GDP 대안 지표 소개, 도시차원 지속가능지표 논의 등



○ 시정전반의 지속가능성 및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 평가

- 근 거 :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6조~8조(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등)
- 대 상 :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이행계획 및 주요 중·장기 계획
- 기 간 : (지표·이행계획)'19.1월~6월 /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 상시
- 방 법 : 서울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으로 평가·분석

- 지 표 : 경제·사회·환경 분야, 총 30개 지표 달성도 평가
- 이행계획 : 328개 세부사업별 목표달성도 점검
-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 : 조례상 30개 행정계획 수립시 사전검토

○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 근 거 :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5조(이행계획의 수립)
- 내 용 : 각 분야별 목표 및 전략 수립, 성과지표 설정

□ 추진 일정

- 지속가능성평가 완료 및 「市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 '19. 하반기
- 2019 서울전환컨퍼런스 개최 : '19. 9월

2. 시민권의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②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강화

③ 자치법규의 적기 정비를 통한 시정의 법적 안정성 확보

④ 대시민 법률서비스 지원 강화

1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신산업 추진,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공정경제 실현을 저해하는 시정 전반의 각종 법령·제도 및 규제를 발굴·개선

□ 사업개요

- 주요사항 : 법령·제도 및 규제 개선 건의,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 실·국 및 자치구 등을 통해 규제·법령·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대정부 건의
 - 조례·규칙 등 제·개정 시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대한 심사 실시
- 소요예산 : 91백만원

□ '19년 추진 계획

① 불합리한 법령개선 및 규제개혁 과제 발굴·입법화 추진

- (발굴) 시민과 기업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령·제도개선 과제 집중 발굴
 - 혁신 생태계 조성, 도심 제조업 재도약, 창업인프라 마련,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발굴 중점 추진
 - ▶ 규제자(공공기관) 중심의 과제 발굴에서 피규제자(유관단체, 기업) 입장 및 민원, 감사, 심판 사례 등으로 발굴 범위 확대
 - ▶ 市 경제정책과 연계된 프로젝트 등 대규모 투자 관련 규제 선제적 발굴·해소
 - 규제 샌드박스(Sandbox) 시행에 맞춰 선도사례 적극 발굴
 - ▶ ICT, 4차 산업혁명, 핀테크 등 규제샌드박스 신청 필요사업 적극 발굴·홍보
- (건의) 정부·국회 및 정당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건의과제 개선을 제고
 - 국무·차관회의,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주요 안건 개선 촉구
 - 행안부와 협업,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을 위한 역량 집중
 - 중앙부처, 법제처, 국회의원, 정당 등 다각적·지속적 건의 추진

〈'18년 주요 추진실적〉

- ① 법령·제도개선 건의과제 : 128건 발굴·건의, 전체 건의과제 중 10건 개정
 - 주요 개정사례
 - ▶ 상가임대차보호법 : 계약 갱신 요구기한 5년→10년 연장,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 민간임대주택법 : 역세권 등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촉진지구지정요건 완화(5천㎡→2천㎡ 이상)
- ② 규제개혁 건의과제 : 32건 발굴·건의, 중앙부처 협의 결과 8건 해결
 - 주요 수용사례
 - ▶ 이동식 액화수소 충전소 운영 관련 법규 마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고압 고정식만 규정 → 저압 액화수소를 활용한 이동식 수소충전소 허용을 위한 특례기준(고시) 개정
 -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 : 경미한 변경에 사업비 감액만 포함 → 경미한 변경에 일부 사업비 조정 등을 추가하는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 추진

○ (홍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건의과제」 시민 공감대 형성

- 서울연구원과 협업, 법령·제도개선 과제 중 대정부 중점 개선 요청 과제를 선별하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건의과제」 성과 홍보('19.3)
- 대정부 일괄추진 건의 및 규제개혁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활용

② 시민과 각계 전문가가 함께하는 시민체감형 규제개혁 추진

○ 민생의 현장으로 다가가는 현장밀착형 규제 해소 추진

- 서울상공회의소,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분야별 관련기관과 시민이 공동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서울시민 규제발굴단」 구성·운영('19.3)
-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활용한 기업 현장방문 규제개혁 건의과제 발굴

○ 시민 참여를 통한 「일상」과 「생업현장」에 숨어있는 민생규제 혁신

- 시민과 함께 시민의 삶을 바꾸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시민 공모」 추진('19.6)
- 시민 불편규제를 연중상시 접수하는 「불합리 규제신고센터」 홍보 강화

□ 추진 일정

- 중앙정부, 국회, 법제처 등 법령·제도 과제 건의 : 수시
- 시민규제발굴단 구성·운영 : '19. 3월
- 규제개혁 아이디어 시민 공모 실시 : '19. 6월

2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강화

시민지향적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침해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성 도모

□ 운영개요

- 설치근거 : 행정심판법 제6조
- 위원정원 : 50명 이내[현원 34명(내부위원 5, 외부위원 29)]
- 구 성 : 매회 8명의 위원으로 구성(외부위원 6, 내부위원 2)
- 회의개최 : 매월 2회(1, 3주 월요일 또는 2, 4주 월요일)
- 심판대상 : 시 소속 행정청(본청 제외, 직속기관 사업소 등) 및 자치구청장의 처분
- 소요예산 : 283백만원

□ '19년 추진 계획

- 생계형 사건 우선처리 등 시민권익구제 위한 행정심판 청구의 신속한 처리
〈 최근 5년간 행정심판 청구 및 재결 현황 〉

구분 \ 연도	5년 평균	2014	2015	2016	2017	2018
청구건수	1,573	1,298	1,715	1,627	1,614	1,611
재결건수	1,383	1,114	1,363	1,600	1,329	1,510

※ 회당 평균 재결 건수 : 46건('14) → 57건('15) → 66건('16) → 55건('17) → 63건('18)

- 주택·토지개발행위 등 고난도 사건 처리를 위한 주·부심제 적극 운영
- 주·부심 지정 건수 : 338건('15) → 390건('16) → 388건('17) → 451건('18)
- 사회적 약자 권익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청구인에게 서울지방변호사회 추천을 받아 대리인(변호사) 선임 및 지원 ※ 50명으로 구성, 1건당 50만원 이내 지원

□ 추진 일정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및 대시민 안내('19. 2.)
- 행정심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야별 법률전문가 위촉 추진('19. 2.~)
- 시민의 권리의식 제고를 위해 행정심판 재결레집 제작 및 배포('19. 5.)

3 자치법규의 적기 정비를 통한 시정의 법적 안정성 확보

시정 추진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 유지 및 시정의 법적 안정성 확보

□ 추진방향

-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법령과의 적합성 유지
- 연중 지속적인 정비대상 발굴을 통한 자치법규 상시 정비
 - ※ 2019. 2월 기준 자치법규 : 총 841건(조례 614건, 규칙 227건)

□ '19년 추진 계획

- 2019년도에는 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 상·하반기
 -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의 제명, 인용조문 등의 불일치 사항 전수조사
 - 전수조사에 따라 경미한 개정사항은 일괄정비 추진
- **중앙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법령 개정사항을 자치법규에 신속하게 반영
 -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적기에 반영 : 행안부, 법제처 협업
 - ▶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법령의 시행시기에 맞춰 조례의 입법 추진
 - 법령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선제적으로 자치법규 정비
- **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치법규 정비
 - 2018년도 정비대상 213건 중 147건 정비완료, 66건은 정비 추진 중
 - ▶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 2019년도 정비대상은 현재 발굴 중이며,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2월말까지 시의회 제출 예정
 -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 : 해당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을 의회에 통지

□ 추진 일정

- **주요 쟁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의회 사전설명 등 협력관계 유지** : 수시
- **전수조사**를 통한 법령 불일치 자치법규 발굴 및 정비 : '19. 2월 ~

4 대시민 법률서비스 지원 강화

시민이 생활현장에서 법률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상의하고 조언 받을 수 있도록 시민법률서비스 홍보 등 지원체계 강화

□ 추진 방향

-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에서 편리하게 법률 상담이 가능하도록 운영 강화
- 시민 생활속에서 발생한 이웃간 분쟁을 자발적·합리적으로 조정 유도

□ 사업 개요

○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 시민이 법률문제를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마을(洞)마다 전담 변호사 배치
- 서울시 424개 모든 동에 마을변호사 848명을 배치하여 무료 법률상담 제공
- 동별 매월 1~4회 정기상담일 지정하여 가까운 장소에서 언제든지 상담 가능
- 연도별 실적 (단위 : 건)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상담실적	14,606	11,719	5,949	3,732
월 평균	1,217	977	496	311

○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

- 이웃간 분쟁을 주민 스스로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공적 완충장치
- 상담원(3명)이 분쟁접수 후 조정전문가(41명) 중 2명씩 배정되어 조정
- 공동주택 층간소음, 누수, 주차장, 건물외벽 시설물 설치, 반려동물 관련 등
- '18년도 추진실적 (단위 : 건)

총상담건수 (A+B+C)	상담으로 종결(A)	조정 신청(B)						이관 (C)
		계	조 정 진 행			조 정 거부취소		
			소 계	합의	결렬		진행중	
1,642	1,365	276	115	80	17	18	161	1

□ '19년 추진 계획

① '마을변호사 제도' 홍보를 강화하여 운영 활성화

- 시민 생활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확대(연 2 → 4회)
 - 서울시내 200세대 이상 1,974개 아파트 게시관에 홍보물 배포
 - 시내 전광판, 유관기관 홈페이지, 지하철 광고판 등
 - 마을변호사 활동 미담사례, 법률상담 사례를 발굴하여 보도자료 배포
- 자치구(동주민센터)와 공동사업으로 홍보
 - 자치구 소식지, 반상회 자료, 상가 게시판 등에 홍보물 부착
 - 자치구와 공동으로 사업관리하고 지역에 적합한 홍보자료 배포
- 마을변호사 법률상담실 환경개선 및 자긍심 고취
 - 독립된 공간에서 시민법률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실 공간 개선

② '이웃분쟁조정센터' 전문성 및 주민접근성 강화

- 건축물 누수, 소음, 동물분야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지속적 확충
 - 조정위원 인력풀을 건축, 소음, 반려견 등 전문분야 확대 운영
 - 분쟁의 성격에 따라 누수, 반려동물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 분쟁해소 지원
- 현장방문, 현장조정을 통해서 찾아가는 조정센터 운영
 - 조정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분쟁내용 파악 후 합리적 조정지원
 - 동주민센터 등 분쟁지역 공공장소를 활용하여 현장조정으로 주민불편 해소
- 자치구도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 강화
 - 성동구는 동별 이웃분쟁조정센터 설치를 위해 주민 교육 등 준비중

□ 추진 일정

- 2019년 마을변호사 운영 계획수립 시달 : '19. 2월
- '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사항 이행점검 : '19. 3월

3. 실효성 있는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① 재정건전성과 확대재정이 양립하는 채무관리계획 수립

②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 추진

③ 2019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운영

④ 2019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⑤ 투자·출연기관 윤리경영 강화

1

재정건전성과 확대재정이 양립하는 채무관리계획 수립

민생, 일자리 등 핵심투자사업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적기 재원조달과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채무관리 계획 수립

□ '19년 지방채 발행 개요

- 발행규모 : 2조 3,667억원('18년 8,131억원 대비 1조 5,536억원 증가)
 - 기존 발행사업 (도시철도공채, 풍납토성 복원 보상) : 8,393억원
 - 신규 발행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 1조 5,274억원

【 '19년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사 업 명	발 행 액
총 계		2,366,715
도시 개발 특별회계	소 계	1,181,947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등 9개 사업	1,070,082
	풍납토성 복원 보상 등 9개 사업	111,865
도시 철 도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소 계	855,348
	도시철도 공채 발행	795,100
	신림선 경전철 건설,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60,248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소 계	144,770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43,667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및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	101,103
주택 사업 특별회계	소 계	184,650
	임대주택 공급	184,650

□ 기본 방향

- (발행시기) **사업공정률, 자금 수요시기, 시 자금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시기 조정을 통해 이자부담 최소화**
- (차 입 선) 사업별로 발행금리, 상환전망 등을 고려하여 정부자금, 모집공채, 금융채 등 **발행조건이 유리한 차입선으로 결정**
- (상 환) 단기물(1~5년 미만)과 중장기물(5~30년 이하)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일시상환에 따른 부담경감, 세입시점을 감안하여 만기구조 분산**

□ '19년 지방채 발행관련 개선사항

- 발행부서를 일원화하여 재정운용 통일성 및 효율성 제고
 - (기존) 회계별 사업부서 발행 → (변경) 기초실 총괄 발행
- 전자입찰시스템 도입으로 발행절차 간소화 및 자금조달 투명성 강화
 - (기존) 오프라인 서면입찰 방식으로 투자자 참여가 제한적이고 처리절차 복잡
 - (변경) 온라인 전자입찰시스템 방식으로 수수료 절감 및 자금조달 용이

□ 채무관리 및 재정건전성 강화

- 기존채무와 '19년 신규발행 지방채에 대해 내실있는 채무관리계획 수립
 - 연도별 채무상환부담, 상환기간 중 균일한 원리금 상환부담, 연도별·월별 만기상환일 분산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상환계획 수립
 - 지방채 발행 및 상환, 예산대비채무비율 등 상시모니터링으로 효율적인 채무관리체계 구축
- 市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정부 관리기준 25% 이하로 유지·관리

【 '18~'23년 중장기 채무 전망 】

(단위 : 억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채 무 잔 액	38,356	53,028	64,655	69,471	67,799	68,227
예산대비 채무비율	16.14	19.97	22.54	23.22	22.13	21.79

-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감채기금에 적립해 채무 상환재원으로 활용
 - 순세계잉여금 중 법정정산금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 감채기금에 출연 가능
 - ※ '02~'18년까지 감채기금 순세계잉여금 적립액 3조 2,957억원(연평균 1,939억원)

□ 추진 일정

- '19년 지방채 관리계획 수립 : '19. 2월
- 지방채 발행 및 채무관리 : '19. 2월~12월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회 계	사 업 명	발행액
계			2,366,715
안 전 총 괄 본 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동부간선도로 확장(녹천교 ~ 의정부시계)	43,667
도시기반시설본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42,850
도 시 교 통 본 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	58,253
푸 른 도 시 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860,000
문 화 본 부	도시개발특별회계	풍납토성 복원 보상	44,200
안 전 총 괄 본 부	도시개발특별회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46,836
안 전 총 괄 본 부	도시개발특별회계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13,995
안 전 총 괄 본 부	도시개발특별회계	동부간선도로 확장(월계1교~녹천교)	10,200
안 전 총 괄 본 부	도시개발특별회계	월드컵 대교 건설	63,535
물 순 환 안 전 국	도시개발특별회계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15,342
물 순 환 안 전 국	도시개발특별회계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상수빗물펌프장 등 7개소)	10,454
문 화 본 부	도시개발특별회계	서울공예박물관 등 건립	53,138
문 화 본 부	도시개발특별회계	창작연극지원시설 등 건립	14,527
안 전 총 괄 본 부	도시개발특별회계	신림~봉천터널 건설	34,720
안 전 총 괄 본 부	도시개발특별회계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15,000
도 시 교 통 본 부	도 시 철 도 건 설 사 업 비 특 별 회 계	도시철도공채*	795,10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 시 철 도 건 설 사 업 비 특 별 회 계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46,25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 시 철 도 건 설 사 업 비 특 별 회 계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13,996
주 택 건 축 국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국 민 계 정)	임대주택 공급	184,650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공채 배분액(2,976억원) 포함됨

2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 추진

공간정책 및 재정투자사업 등에 대해 근본적이고 실행력 있는 균형발전 추진을 통해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지역불균형 해소 도모

□ 추진 방향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서울의 지역격차 해소 및 지역별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전략 수립
- 시민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보편적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적 지원 추진

□ 추진 실적

-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 발표('18. 8월)
 - **교통** 비강남권 4개 철도노선 재정사업화 및 공유차량 우선 주차구역 확대
 - **주거환경** 빈집 활용 임대주택공급 및 주민 자율 소규모 정비 활성화
 - **골목경제** 주민주체 '선순환 경제생태계' 구축 및 마을단위 '생활상권' 확대
 - **교육·문화·돌봄** 비강남권 학교지원 강화 및 돌봄·문화시설 집중 설치
 - **공공기관 이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재개발원 등 공공기관 강북 이전검토
-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19. 1. 3 시행)
 -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근거 마련
 -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구성 규정, 존속기한 설정(5년)

□ '19년 추진 계획

-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
 - 존속기한 : 2019.7월 ~ 2023. 12월 ※ 연장 가능
 - 세출용도 : 지역 간 불균형이 있는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사업

- 소요재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과밀부담금 등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9	2020	2021	2022	
계	10,000	1,800	2,620	2,750	2,83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290	300	315	330	345	
시비	과밀부담금	1,180	-	380	390	410
	일반회계 전입금 등	7,530	1,500	1,925	2,030	2,075

- '19년 운용방법

- ▶ (신규사업) '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부터 수요조사 후 편성
- ▶ (회계이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의 생활서비스시설 건립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

〈 주요 회계이관사업 〉

- ◆ 문화시설 : 아동청소년예술교육센터, 문화복합시설 건립 등 29개 사업, 824억원
- ◆ 보육시설 :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3개 사업, 763억원
- ◆ 노인여가복지시설 :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어르신복지관 설치사업, 198억원
- ◆ 공공체육시설 :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8개 사업, 153억원

○ 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실행력 확보 방안 마련

- 향후 5년을 목표로 한 지역균형발전계획의 로드맵 제시
- 자치구별·과제별 자원투자계획과 투자대상 우선순위 선정 기준 정립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정책지표 설정 및 모니터링 시행 방안
-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평가·환류체계 구축 방안

○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복지, 산업경제, 환경, 도시계획,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위촉(15~20명)
-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시행상황 점검 및 평가 등 심의·자문

□ **추진 일정**

- 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19. 2월 ~ 12월
- '19년 균특회계 추경예산 편성 대상사업 수요조사 : '19. 3월
-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9. 3월 ~
-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 추진현황 점검 : '19. 8월

3 2019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운영

주요 사업의 투자심사를 통해 한정된 자원의 계획적 운용 및 투자심사의 객관성·타당성·전문성 확보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 도모

□ 투자심사 개요

- 심사대상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등
-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자원조달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분석
- 심사방법 :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15명 내외 심의(외부 12, 내부 3)
- 심사결과 :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 추진 실적

- 시 투자심사 : 총 150건, 총사업비 6조 7,717억원(총 7회 실시)
 - (심사결과) 적정 58건(38.7%), 조건부추진 80건(53.3%), 재검토 및 부적정 12건(8%)
- 중앙투자심사 : 총 33건, 총사업비 3조 6,385억원(총 4회 실시)
 - (심사결과) 조건부추진 28건(84.8%), 재검토 5건(15.2%)

□ '19년 추진 계획

-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의 **투자심사 절차 간소화** 예정(4월중 규칙개정)
 - <현행> 중앙투자심사 의뢰 전 시 투자심사위원회 상정 및 심사
 - ➔ <개선> 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생략, 시 내부검토 후 중앙투자심사 의뢰
- 권역별(생활권 or 행정동) 지역낙후도(등급, 점수) 반영 등 투자심사 보완
 - <현행> 투자심사 시 '지역균형 및 입지타당성' 평가 시행(정성적평가)
 - ➔ <개선> 지역균형발전 관련 지표를 마련하여 객관적·정량적 평가
 -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심사 보완방안 연구" 시행('19.1~10월,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 추진 일정

- 시 투자심사 : 정기심사 4회(3/21, 5/30, 7/25, 9/26), 수시심사
- 중앙투자심사 : 정기심사 3회(3/31, 6/30, 10/31), 수시심사

4 2019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이 참여하여 예산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하는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내실화하여 예산의 투명성 및 행정신뢰도 향상에 기여

□ 추진개요

- 추진내용 :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이 직접 심사·선정하여 예산에 편성
- 운영규모 : 700억원 내외(시정분야 450, 지역분야 260 내외)

구 분(추진부서)		운영규모	사업내용	심사주체
시정 분야 (450억원)	시정참여형 (기획조정실)	350억원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해결 사업	市 참여예산위원회
	시정협치형 (서울혁신기획관)	100억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 집행 등 전 과정에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	
지역 분야 (260억원 내외)	지역참여형 (기획조정실)	20억원 내외	지역사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4개구, 구별 평균 5억원)	區 참여예산위원회
	구단위계획형 (서울혁신기획관)	210억원 내외	구 지역사회혁신계획에 참여예산사업 통합추진 시 인센티브 부여(21개구, 구별 평균 10억원 내외)	區 민관협치회의
	동단위계획형 (서울혁신기획관)	30억원 내외	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계획단 등 발굴 사업(25개구, 동별 3천만원)	市 동단위 시민참여 예산심의회

※ 시정협치형, 구·동단위계획형 사업은 서울혁신기획관에서 별도 계획 추진

〈 2018년 시민참여예산 선정결과 〉

구 분	계	시정분야		지역분야		
		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	지역참여형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
사업수(건)	730	67	35	91	176	361
사업비(억원)	647.2	350.3	95.3	66.7	111	23.9

□ '19년 추진 계획

- 사업공모 : 2020년 시민생활에 필요한 예산사업('19.2.11~3.22)
 - 유형 : 시정 참여형, 시정 협치형, 지역 참여형
 - 신청 : 시민,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

- 사업심사 : 민관예산협의회(10개 분야) 심사를 거쳐 시민 투표 상정
 - (10개 분야) 여성·교육, 경제·일자리, 복지·행정, 교통, 문화·관광, 환경, 도시안전, 주택, 공원, 협치
- 사업선정 : 시민투표 및 시 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승인(8.31예정)
 - 시정분야 : 시민 전자투표 실시 후 市 참여예산위원회(한마당 총회)에서 결정
 - 지역분야 :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심사 후 市 참여예산위원회(한마당 총회)에서 승인

□ 운영 활성화 방안

- 컨설팅단 운영 내실화 및 참여사업 모니터링 등을 통한 품질향상 제고
 - 제안서 수정·보완 등 컨설팅단 운영 후 평가회 개최(신설), 시민 모니터링 결과 피드백 등
- 참여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다양화 및 상설교육 실시
 - 예산 기본교육(15회), 심화교육(10회), 찾아가는 예산학교(10회), 청소년 예산학교(10회) 등
 - 민간전문기관 활용을 통한 예산학교 상설(월별) 운영
- 자치구 참여예산제 발전 및 활성화 지원
 - ‘지역사회혁신계획’에 기반한 구단위계획형 추진 자치구 지원 확대(11개 → 21개)
 - 자치구 평가지표 개선 및 평가범위 확대(1년 → 2년)로 사업관리 강화
- 시민참여 예산제 관련 시민의견 조사로 제도 운영 내실화
 - 참여예산제 실시(사업 접수·심사·실행 등)에 대한 인식·만족도 등 결과 활용

□ 추진 일정

-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 2월~3월
- 시민참여예산위원 제안사업 심사 : 3월~7월 초
- 시민투표 대상사업 공고(부적격 사업 이의 제기·조정) : 7월 중
- 시민투표(전자투표) 및 사업 최종 선정(한마당 총회) : 8월
- 예산안 편성 및 시의회 심의·의결 확정 : 9월~12월

◆ 기존사업의 예산과정에까지 시민참여 범위 확대

- 숙의·공론, 온라인 의견 제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더 많은 시민이 더 깊게 참여하여 행정과 시민이 함께 예산을 설계하는 프로세스 구축(숙의예산제 계획 수립 중)

5 투자·출연기관 윤리경영 강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투자·출연기관 임직원의 비리·일탈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윤리경영을 강화하고자 함

□ 추진 방향

- 투명한 계약·회계 문화 조성을 위한 상시 평가체계 구축 및 처벌 강화
- 투자·출연기관의 부정비리, 성희롱·성폭력 등 사전 예방교육 실시

□ 추진실적

- 투자기관 반부패 윤리경영 자체 추진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시달('18. 9. 3.)
 - － 계획 수립·시행 : 교통공사, 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에너지공사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윤리경영 평가지표 신설
 - － 투자기관 : 채용비리시 1점 감점 / 출연기관 : 윤리경영 지표 총 6점
-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대상 공직윤리·청렴교육 과정 개설 협의 중
 - －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투자·출연기관장 및 임직원 교육과정 신설(3월 예정)

□ '19년 추진 계획

- 기관 및 개인 일탈에 대한 **자체평가 강화**
 - － 임직원의 금품수수 비리 적발시, 성과평가 등급 및 평가급 지급률 하향 조정
 - － 기관별 입찰 및 하도급, 공사비 지급시 계약·회계분야 자체평가 매뉴얼 마련
- 일탈·비리 임직원(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등)의 **징계 양정기준 상향**
 - －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금품수수, 횡령, 부당 계약 등의 자체 징계기준 조정
-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교육과정에 공직윤리·청렴 등 내용 반영
 - － 청렴은 물론 공직마인드, 경영마인드, 리더십, 조직관리 등 공통교육 실시

□ 추진 일정

- 출연기관 반부패 윤리경영 자체 추진계획 가이드라인 시달 : '19. 2월
-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공통교육 실시 : '19. 3~10월

4. 교류협력에 기반한 서울의 위상 제고

① 지방-서울간 정책 교류를 위한 찾아가는 혁신로드 운영

② 지역 수요 맞춤형 우호교류협약체결 추진

③ 글로벌 리딩 도시 위상 강화를 위한 전략적 도시외교 추진

④ 우수정책수출 및 국제기구 유치로 서울의 국제적 위상 강화

1

지방-서울간 정책 교류를 위한 찾아가는 혁신로드 운영

우리시의 우수한 기술·제도를 지역 수요에 맞게 공유·전파하여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방안 마련

□ 추진 방향

-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 정책 정착을 위해 **유기적·지속적 교류 지원 시스템** 구축
- **혁신자문단(공무원·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지역 밀착형 정책 컨설팅 추진

□ 추진 실적

- 타 지자체 공무원 등 대상 정책 현장을 방문하는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운영** 중
 - － 서울혁신파크, 성수동 소설밸리, 도시재생센터 등 180여개 현장 운영('18년 5,106명)
-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등 각종 혁신적 정책이 타 지역 내 확산되는 성과 도출

▶ 지역 내 안정적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 중심의 민·관 정책 자문 사업 필요

□ 향후 계획

- 지역 정책 요청에 따라 **공무원, 서울연구원, 전문가 등으로 '혁신자문단' 구성**
 - － 부서 및 유관 기관의 추천을 통해 분야별 자문단 인력풀 구성·운영
- 제로페이, 신재생에너지, 도심 재생, 4차 산업 등 **혁신 사업 중심으로 정책 공유**
 - － 지자체가 원하는 정책 공유를 위해 지자체 수요 조사 후 분야 세분화
- **'혁신자문단'은 지역간 상호 교류를 통해 정책 공유 및 확산 방안 마련**
 - － 서울·지역의 정책 현장 방문, 컨설팅 및 기술 지원으로 발전 방향 제안
 - ※ '19년 지자체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시범 운영(3개 지자체) 후 점진적 확산

□ 추진 일정

- 찾아가는 혁신로드 계획 수립 및 자문단 구성 등 : '19년 상반기
- 찾아가는 혁신로드 운영 : '19년 하반기

2

지역 수요 맞춤형 우호교류협약 체결 추진

우리시와 타 지자체와의 우호교류협력 확대 및 상생 공동체 형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 도모

□ 추진 방향

- 체계적인 평가·환류 시스템 구축 및 지자체간 긴밀한 협의·소통 창구 마련
-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교류사업 집중 발굴

□ 추진 실적

- 시민 체감형 교류를 위해 민선 5기부터 기초단체 중심으로 우호교류 추진
 - 총52건(광역 13, 기초 39) 중 민선 5기 이후 47건(광역 8개, 기초 39개) 체결
- 지역 농수산물 판로 개척, 축제·관광지 홍보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 그간 구축한 지역간 연계망을 바탕으로 교류사업의 질적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

□ '19년 추진 계획

- 협약체결사업 전수조사를 통한 성과분석으로 정책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 담보
 - 민선 5기 이후 체결한 협력사업 대상으로 세부 사업별 현황 분석 및 보완 방안 마련
- 공무원·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자문단'(혁신로드) 활용, 지역 현장 의견 수렴
 - 서울-지방 정책 이해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협력·교류 사업 발굴
 - 혁신자문단이 발굴한 아이디어에 대해 전문가·관련 부서 등 검토를 거쳐 정책화
- 마을과 마을까지 우호교류협력체결 대상을 확장하여 정책 체감도 증대
 - 현 양자간 MOU체결 방식에서 다자간 MOU 방식 병행(우리시·마을·마을 등) 추진
 - 관광 상품 개발, 축제 연계, 특산품 유통 판매 개선 등 사업 범위 및 협력단위 확대

□ 추진 일정

- 우호교류협약 개선 계획 방침 수립 : '19. 2월말
- 우호교류협약 사업별 보완 계획 수립 및 시행 : '19. 3월~

3 **글로벌 리딩 도시 위상 강화를 위한 전략적 도시외교 추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 경제 살리기 전략 모색을 위한 혁신 도시 해외순방 등을 통해 도시외교 지평 확대 및 국제무대에서의 역할 강화

추진 방향

- 한반도 평화, 한-아세안 협력외교 강화로 외교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 유력인사 초청 및 경제혁신도시 전략순방으로 실질 경제협력 확대 추진

'18년 추진 실적

- 자매우호도시 확대를 통한 도시외교 외연 확장 : 6개 신규 체결 ※총 68개 도시
 - 무스카트(오만, 9.6), 델리(인도, 9.13), 캄팔라(우간다, 9.19), 빌바오(스페인, 10.2), 취리히(스위스, 10.3), 탈린(에스토니아, 10.5)
- 해외 순방을 통한 서울시 우수정책 홍보 및 도시간 협력 강화
 - 리완유 세계 도시상 수상 및 서울시 도시재생사례 발표(싱가포르, 7.7~10)
 - 국제사회적경제(GSEF)총회 및 디지털혁신 정책공유(스위스, 에스토니아, 9.27~10.7)
 - 한-중 협력강화를 위한 한중지사 성장회의 주제, 리커창 총리 면담(11.25~28)
- 해외도시 시장 및 국가 정상 등과의 교류로 서울시 국제적 위상 강화
 - 평창 동계올림픽 연계 해외 16개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58명 초청 등
 - 폴란드 대통령('18.2월), 독일 대통령('18.2월), 에스토니아 대통령('18.10월) 등 국가정상 서울시 방문 및 협력강화 논의, 명예시민증 수여

'19년 추진 계획

경제살리기 방안 모색 및 신북방 도시외교를 위한 전략적 해외 순방

- 해외 주요 도시 스타트업 지원기관과의 실질적 협력방안 마련
 - 아시아(홍콩, 선전), 중동(텔아비브) 등 주요 도시 창업 지원 정책 교류·협력
- 도쿄 도시회복력 포럼 등 참가로 서울시 우수 정책 및 혁신사례 발표
 - 도시 혁신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서울시 정책 공유 및 홍보

② 한반도 평화,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 강화

-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서울 지속가능 평화포럼’ 개최(10월)**
 - 목적 :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 번영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내용 : 노벨평화 수상자 기조강연, 동북아 협력을 위한 시장 회의 등
-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수도시장회의’ 개최(10월)**
 - 목적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9.11월 예정) 개최에 맞춰 각 국 수도의 시장회의를 개최하여 아세안 지역과의 구체적인 협력 강화
 - 내용 : 자매·우호 협정 체결, 한-아세안 수도 협의회 구성 등

③ 해외 자매우호도시와 문화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증진

- **해외도시 초청공연, 음식·관광을 홍보하는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개최(9월)**
 - 서울시 대표 글로벌 문화축제로서 각 국의 문화와 관광, 먹거리 등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축제로 추진
 - ※’18년 70개국 대사관 및 15개 서울시 자매우호도시 공연단 참석
- **자매우호협정 체결 기념행사 등 도시간 문화교류를 통한 협력 계기 마련**
 - 자카르타(35주년), 암스테르담(20주년), 아스타나(15주년)와의 협정체결을 기념하여 상호 대표단 파견, 공연·전시 등 문화행사 개최
 - 파리, 블라디보스토크, 웰링턴, 양곤 등과 공연단 파견 등 문화교류 추진

④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에 맞는 도시외교 및 정책수출 추진체계 개선

- **서울시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한 도시외교 종합계획 수립**
 - 도시간 교류사업, 정책수출사업, 외국인 지원사업을 전략적으로 연계
- **도시외교 및 정책수출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전담조직 설립 추진**
 - 증가하는 도시간 국제교류사업 및 해외정책 수출 수요에 전문적 대응능력 강화
 - 정책기능(市 국제협력관) - 집행기능(전담조직) - 연구기능(서울연구원)으로 체계화
 - ※ 추진일정 : 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19년), 전담조직 출범(’20년)

4

우수정책수출 및 국제기구 유치로 서울의 국제적 위상 강화

서울형 정책모델의 해외진출, 국제기구 지속 유치 및 교류협력 활성화로 도시 간 상생발전 도모 및 글로벌 도시 서울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사업개요

-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해외진출사업 개발 및 민간기업 수주 지원
- 서울의 성공적인 도시발전 경험과 정책을 해외도시와 공유 및 전파
-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 강화로 글로벌 리더십 제고



※ 소요예산 : 5,862백만원 (정책진출 1,796백만원, 국제기구 유치·협력 등 4,066 백만원)

□ 추진 실적

- 유관기관,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해 市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추진
 - － 대중교통시스템(우크라이나 키예프시, 필리핀 세부시, 몽골 울란바토르시), 세무정보시스템(스리랑카 콜롬보시) 등 11건 완료
- 해외도시, 국제기구 대상 서울시 우수정책 홍보 및 공유
 - － 교통, 주택 정책 등 홍보를 위한 「서울정책아카이브」 사이트 운영
 - － 국제포럼, 유관기관 행사 참여 등을 통한 서울시 우수정책 공유(39회)
- 국제기구 신규 유치 및 국제기구와의 지속적 교류 협력
 - －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ASEM Global Ageing Center) 유치('18.6월)
 - － 국제기구 간담회(5월),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6월) 등 개최

□ '19년 추진 계획

- 중앙정부, 유관기관 자원 활용하여 해외도시 협력사업 개발 및 추진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데이터센터),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매립지 개선), 탄자니아 다레살람 (교통체계개선) 등
 - ※ 기존사업 계속 추진 9건, 신규사업 개발 11건
- 다자개발은행 등과의 정책공유 · 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기회 확대
 - 세계은행(WB) 등 협력강화를 위한 정책공유 워크숍 개최(2월,10월)
 - 미주개발은행(IDB)과의 MOU 체결을 통한 중남미 지역 진출 모색(3월)
 - 민간기업 해외진출 협력 논의를 위한 '민관협력포럼' 개최(5월,10월)
-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실행 전문 인력 '서울정책컨설턴트' 양성
 - 해외수요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퇴직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20명 선발
 -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집중교육 실시(시립대, 3주/7~8월)
 - 협력도시 파견 정책컨설팅, 해외사업 개발 등 인력으로 활용
-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 신규 유치 및 지원 기반 조성
 - 세계보건기구(WHO) 아·태지역 환경보건센터, 세계식량기구(FAO) 연락사무소 등 유치
 - 국제기구 전용공간(클러스터) 추가 확보(도심지역내) 추진

□ 추진 일정

- 우수정책 진출사업 및 국제기구 유치 추진 : '19. 1~12월
- 민관협력포럼 및 다자개발은행 공동워크숍 개최 : '19. 2~10월
- 서울시정책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운영 : '19. 7~8월

별첨

2018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2018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69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69	47	14	8	
	시정· 처리요구사항	16	7	6	3	
	건의사항	24	11	8	5	
	기타(자료제출 등)	29	29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시민들은 단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예산성과금을 받는 것에 한계가 있는 반면, 공무원들은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쉽게 성과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시민과 공무원의 아이디어를 동일선상의 기준에서 평가하고 있음. 평가기준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시정하기 바람 (추진 : 시민참여예산담당관, 협조 : 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성과금의 평가기준은 공무원과 시민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정성평가(80%), 정량평가(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성평가: 창의성, 노력, 파급효과 및 제도화·본연의 업무 · 정량평가: 예산절감·수입증대 실적 - 시 민: 개선기여도(30%), 창의성(10%), 노력도(5%), 구체성(5%), 기본점수(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기여도: 예산절감·수입증대, 내용 개선 유무, 실행가능성 ○ 시민의 아이디어가 공무원의 아이디어보다 성과 창출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여도 보다는 노력도의 비중을 상향하고 있음. 특히, '18년도에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적극 반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기여도 점수 하향(35%→30%) - 노력·구체성 점수 상향 조정(5%→10%) - 실무검토 비대상은 최하 점수 하향 조정(50%→30%)하여 사례금(상품권) 지급 확대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계획 수립: '19. 3월말 ○ 예산학교 운영 및 시정 홍보 매체를 통한 시민성과금 제도 대시민 교육·홍보 강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한시기구 관련해서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8개 기구에 대해 시정요청을 했는데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있음. 법을 위반한 3급 이상 기구에 대한 시정하기 바람.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시 3급 임시기구는 현재 6개를 운영 중임, 이는 기구정원 규정상 실·국·본부 수 제약(18개)하에서 복지·교통·환경· 도시재생 등 증가하는 대도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임 - 찾아가는 동복지센터, 보행친화 도시 서울 추진, 대기질 개선, 도심· 주거재생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획 및 조정 역할 담당하고 있음 ○ 이러한 임시기구 설치의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맞는 기구 운영을 위해 업무의 중요도 및 통솔범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임 ○ 이와 병행하여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음
<p>○ 예산성과금 제도 관련하여 공무원과 시민의 수령액이 많은 차이가 있음. 예산성과금 제도의 경우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됨. 향후 포상금 지급제도 개편을 통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추진 : 시민참여예산담당관, 협조 : 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적극 반영중임. - 개선기여도 점수 하향(35%→30%) - 노력·구체성 점수 상향 조정(5%→10%) - 실무검토 비대상은 최하 점수 하향 조정(50%→30%)하여 사례금(상품권) 지급 확대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18년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127건)을 통해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 신고 활성화를 위해 대시민 홍보 강화 추진 - 예산학교 교육·홍보, 시정매체를 통한 동영상 홍보 등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계획 수립: '19. 3월말 ○ 예산학교 운영 및 시정 홍보 매체를 통한 시민성과금 제도 대시민 교육·홍보 강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마다 채용공고 및 경력 산정 기준 등이 다름. 특히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응시자 제출서류 반환'과 관련하여 위법의 요소가 있는 공고가 많고, 6개월에서 1년 미만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기관이 많아 기간제 직원 출신들이 차별받을 수 있으므로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 모든 기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등 현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응시자 제출 서류 반환 등 법령 전반 이행여부 ○ 경력직 채용시 경력 인정 현황조사 및 기준마련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경력직 채용시 6월~1년 미만 기간제 경력 인정 현황 등 세부내용 조사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절차 공정화 준수여부 및 경력직 채용 현황조사 : '19.1~2월 ○ 경력직 채용시 통일기준 마련 검토 : '19. 상반기
<p>○ 시민참여예산제 관련 온라인 투표가 실적 위주의 투표가 되고 있어 문제임. 실질적인 제도운영이 될 수 있는 온라인 투표제도 개선이 필요함 (시민참여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이 심사하고, 시민이 최종 선정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로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임 ○ 특히, 2018년도에는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 자치구에서 4주간 현장홍보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에 비해 3,858명이 증가하였음 ○ 향후에도 시민투표과정에서 시민들이 사업을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19. 2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자문관들 중 조례에서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국외출장 등)나 급여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음. 일부 자문관의 이탈로 비취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p> <p>(추진 : 민관협력담당관 협조 : 인력개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및 2항에 따라, 자문관(市 소속 공무원 외의 사람이 市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출장 하는 경우)은 국외 출장 시 사전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 ○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 여행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적격자와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효율적 국외출장을 위한 2018년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에서는 공무국외여행 필수 절차 既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국외여행 방침서 수립 시 인력개발과 협의 필수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여행자 및 여행인원의 적정성, 시기의 적합성, 여행기간 등에 대해 심의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조례, 규칙, 방침 등에 제제 규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민관협력담당관에서는 민간전문가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전달하고, 인력개발과에 민간전문가 운영현황 등을 공유하여 심의과정에서 민간전문가의 해외출장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성격과 형태가 각기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인 성과지표로 경영평가를 하고 있음. 경영평가 결과로 성과급이 결정되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방침이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또한 전년도에 대한 평가와 성과급 지급 시기가 다음연도 10월로 너무 늦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공기업담당관)</p>	<p>□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평가 지표는 공통지표와 사업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지표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기관별 성과지표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지표, 50%) 리더십·전략(16), 경영시스템(14), 사회적책임(20) - (사업지표, 50%) 기관별 특성에 따라 주요사업(9~19개)을 선정·평가 ○ 모든 평가지표는 전년도에 시 주관부서 및 기관 등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수립함으로써 평가 수용도 및 신뢰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 개선 의견수렴 및 수시 실무회의, 개선안 확정 : 상반기중 ○ 투자기관의 경영평가는 행안부 평가가 매년 8월에 확정됨 출연기관의 경우 외부 전문 평가기관 용역 결과가 5~6월 중에 나오게 되므로 불가피하게 성과급 지급시기가 10월로 늦어진 면이 있으나, 향후 불필요한 절차는 최소화하여 지급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 수립 및 외부 평가전문기관 용역발주·계약체결 : 1~2월 - 평가진행(기관 실적보고서 제출 및 평가위원 위촉 등): 3~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준비(3월) : 기관 실적보고서 제출 및 기관별 평가위원 위촉 등 ※ 평가진행(4월) : 기관별 평가위원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 평가결과(초안) 작성 및 기관 이의신청 접수·검토 : 5월 - 결과 정리 및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의결 : 6월 - 평가결과 기관통보 및 성과급 지급 추진 :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는 매년 8월에 확정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서울연구원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어 서울시 경영평가에서도 지적을 받았으나 가장 좋은 평가등급을 받아 31억의 성과급이 지급됨. 서울연구원의 특성상 많은 연구원들이 포괄임금 외에 외부출장, 강연을 통해 부수입을 얻고 있으며 성과급까지 지급되는 상황에서 타 출자출연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우려가 됨. 보통 포괄임금제는 무료노동의 문제를 지적받고 있으나 서울연구원은 그 반대인 경우이며 연구직 외 일반행정직, 전문직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받고 있는 것도 시정이 필요함. 다른 사례들을 비교하여 급여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보고하기 바람.</p> <p>(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임금제 개선을 위한 자체연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연구원 중장기 조직운영 발전방안 추진계획 수립 연구 수행중(2018.12.~2019. 6.) - 합리적 성과관리 및 보수체계 구축 - 포괄임금제도 개선 등 최근 이슈를 반영한 연봉 및 성과급제도 개선(안) 마련 ○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발표 후('19. 4월 예정)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 임금체계 적용 예정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회 개최 및 내부의견 수렴을 통한 수정·보완 : '19. 6~7월 ○ 개선 임금체계 적용 : '19. 7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민간위탁, 민간보조사업 관련, 사업의 주체인 민간이 도덕성이 높아야 함에도 매년 부정수급 등의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가 경미하다고 생각됨. 금전적 손해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다음부터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조직담당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민간위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 매뉴얼 수탁기관 종사자 교육 강화로 재발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3월 통합회계감사 실시 결과 등을 토대로 실제 지적사례 활용 교육 실시 - 지도점검 시 전문가 동행 컨설팅 추진 ○ 수탁기관 선정 심사 시 회계감사 결과 등 반영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자 심사 정량평가(신인도 또는 감점) 항목으로 최근 3년간 지도점검, 회계감사 결과 의무적 반영방안 검토 ※ 입찰참가 제한은 법률에 직접 규정 필요, 지방계약법 준용 불가 (행안부 질의회신, '18.1.15) <p>(민간보조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및 36조에 따르면, 부정수급으로 보조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제36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시장은 제33조 제2항 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33조(법령위반 또는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②항 :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에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18년 부정수급 적발 및 조치 현황(서울시·자치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수금액 : 453건, 223,091천원 - 환수·반환 실적 : 379건, 94,820천원 (건수 대비 83.7% 환수)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감사위원회에 보조금감사팀 신설·운영 중임('19.1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 (민간위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관 종사자 회계분야 교육 실시 : '19년 3~7월 ○ 제도개선 검토(재무과, 법률지원담당관 협조) : '19년 상반기 <p>(민간보조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에 대한 집행실태 점검,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상시 관리·감독 강화 ○ 부정수급 적발시 법령에 의한 환수 및 교부제한 등 철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2018 예산편성 잠정기준에 따르면 30억 이상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와 사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경제진흥본부는 올해 추경으로 올린 서울페이 관련 30억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대답함. 이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던 점을 시정하기 바람. (서울페이추진반)</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추경 당시, 다음연도 공공예산 투입 필요성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예산편성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총사업비를 추경 편성금액인 30억원으로 추정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에는 투심대상이 아니었음 ※ 투심대상사업(시사업)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 ○ 이후 '19년 예산편성에 따라 총사업비가 40억원을 넘어 '18.10월 투자심사를 받았으며 심사결과 '적정' 통보 받음 <p style="text-align: center;">〈 투심개요 〉</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가칭)서울페이 도입 - 투심/결과일자 : '18.10.24. / '18.11.5. - 심사결과 : 적정(계획대로 사업추진) - 사업비 : 7,767백만원 </div>
<p>○ 2018년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으며, 특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경우 300여명의 위원을 수시로 구성 해산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상위법 위반 여부와 함께, 관련 조례 개정당시 조례 개정 근거 혹은 상위법 위반 여부 확인 자료가 될 수 있는 자문 자료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추후 보고 바람 (재정균형발전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중 ○ 위원 300명 전원을 소집하여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 인력 풀(pool)로 관리하면서 부서별로 관련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회의 개최 시마다 분야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 :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보조사업 성과평가,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등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률자문('17.6.16.) 결과, 지방재정법 규정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 위반은 아님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위·해촉 등 관리 철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검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투자출연기관에 관해서는 여성 비율을 “노력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음. 여성 비율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바라며, 위원회 설치 조례의 성비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기초실 산하 위원회의 경우 시정해주기 바람 (기획담당관,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투자·출연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출연기관 개별 설립운영조례에서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행) 5개 기관 / (임의) 16개 기관 / (미규정) 2개 기관 ○ 투자출연기관 위촉직 비상임이사 여성비율 확대 우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개 기관 위촉직 비상임이사 여성비율 39%(’19.1.1현재) ※ ’19.1월 기준 위촉직 비상임이사 118명 중 여성이사 45명 ※ 위촉직 비상임이사 결원발생 시 여성우대 등을 통한 여성인재 추가 확보 <p>(기획조정실 산하 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위원 위촉률 40% 미만 위원회 집중관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 만료 3개월 전 위원회 관리 부서에 사전 예고 시행 - 여성위원 40%미만 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시 여성위원 신규위촉 의무화 - 여성위원 40% 미만 위원회 관리부서 자체 여성위원 위촉계획 수립·시행 ○ 여성인재 인력풀 확충(기술분야 등 여성인재 희소분야 집중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협력하여 자체 여성인재 DB 구축 중 - 여성가족부에 여성인재 인력풀 DB 확대 건의 및 협조체계 마련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출연기관 이사회 성(性) 비율 지속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원 등 신규설립기관 이사회 구성 시 성비균형 강조 ○ 기존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재위촉 시 여성위원 우대 위촉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위촉: ’19.1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촉직 위원 구성(안) : 총 8명(남성 4, 여성 4)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20.1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 만료 : 2020. 1월 예정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현행 규정이 미비하여,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60점 미만 시 재계약에서 배제되나, 공모단계에서 배제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공모단계부터 배제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에 민간위탁기본법 등 상위법 제정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법률에 직접 규정 필요 ○ 수탁기관 선정 심사 시 종합성과평가 반영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자 심사 정량평가(신인도 또는 감점) 항목으로 최근 3년간 종합성과평가 결과 의무적 반영방안 검토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상위법 입법 건의 : '19년 상반기 ○ 제도개선 검토(재무과, 법률지원담당관 협조) : '19년 상반기
<p>○ 서울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 정원으로 편성하여 발표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기 바람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계획」 (노동정책담당관-90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은 원칙적으로 정관 및 직제규정 상 정원내인력으로 운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 무기계약직 모두 포함 - 직군의 편입 및 직군·직렬 신설등은 기관별 노사합의로 결정 ○ 산하기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시 정규직 정원으로 편성중 ○ 디지털재단 정원내 무기계약직 정규직편성 시정요구('18.10월) ○ 비정규직 정규직화 기준준수 철저(공기업담당관-730, '19.1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재단 무기계약직 일반직 편성 : '19. 3월(정기이사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디지털재단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 비정규직은 전혀 받지 못하고 정규직만 받았다고 확인되었음. 관련 규정 등에 적합하지 확인해보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추진 : 공기업담당관, 협조 : 스마트도시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급 지급현황 전수조사(전 출연기관) : '18.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개 기관 중 디지털재단을 제외한 14개 기관이 정규직 및 비정규직에게 성과급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근거 : '18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 '18년 성과급 지급기준 준수 철저」 통보(전 출연기관) : '18.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비정규직 포함)·기준 등 지급지침 재공지 ○ 디지털재단 비정규직 근무자 성과급 지급조치 : '18.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인원 : 10명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대상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교육 실시 : '19.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급 지급기준, 방법, 대상 등 세부내용 교육(평가 종료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도 교육 실시('18.10.4)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한강몽땅 행사 추진과 관련, 행사 이후 특별휴가 실시하라는 시장의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그날 똑같이 준비하고 일하신 분들 중에서 공무원 분들은 이틀을 췌는데 현장인력은 하루만 준 사례가 제보됨. 일하는 직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확인하고 시정 조치해주시기 바람 (한강사업본부 총무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한강몽땅 여름축제』 참여직원 특별휴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한강몽땅 축제 사업 담당자 및 지원근무자 - 실시시기 : 2018. 9월 이내 ○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몽땅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축제기간에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심신을 달래기 위해 특별휴가를 실시 - 축제기간 지원근무한 공무원(192명)에 대해 1일의 특별휴가를 실시하였으며, 소속 공공안전관과 공무직도 자체계획에 따라 1일의 특별휴가를 공평하게 실시하였음 ※ 1년간에 걸쳐 축제 행사를 준비한 직접 사업담당자 등(27명)은 특별한 공로에 따라 2일의 특별휴가 실시함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에도 공무원, 공무직을 구별하지 않고 실제 축제 준비에 기여한 기간을 충분히 감안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하겠음

건의 사항

건의 사항	조치 결과
<p>○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이메일로만 제출하면 확인을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USB로도 제출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서울시 전체에서 실시하여 주기 바람 (기획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각 실·본부·국에서 책자 및 파일(USB)을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고 있음. ○ '19 행정사무감사시부터는 책자 및 USB를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님들께 직접 전달하도록 개선하겠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책자 및 USB를 의원실로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실·본부·국 및 기관에 안내('19. 10.)
<p>○ 공공기관 생리대 비치사업은 홍보가 활성화 되면 시민들의 활용등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적은 예산으로 소외계층의 필수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니, 관련 예산 증액 등을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람 (여성권익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공공기관 200개 이상 비상용 생리대 비치 ('18년 시범사업(별도 예산 없음) → '19년 519백만원 예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여성 이용시설, 복지관, 도서관 등 우선 확대 - 취약계층 지역에 전략적 집중 비치 ○ 민관 협력을 통한 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 및 시민단체등과 협력, 민간영역으로 사업 확대 - 생리대는 필수품이라는 인식 확산 및 여성 성건강권 강조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사업자 및 사업기관 선정(3월), 사업시행(4월) ○ 민관협력 캠페인 자치구 독려 등으로 비상용 생리대 비치 문화 확산

건의사항	조치결과
<p>○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2시간 근로를 준수하여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초과 근무로 인한 업무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추진: 기획담당관 협조: 조직담당관, 인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셧다운제 실시(금, 19:00) ○ 가정의 날 운영 : 주 2회(수, 금) 방송안내 운영 ○ 과로직원 초과근무시간 모니터링 관리('18. 5월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기준 : 월 100시간 또는 2월 연속 80시간 이상 ○ 초과근무수당 개선 관련 제도개선 건의(시 → 행안부, '18.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급 팀장 초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으로 전환 - 시간외근무 사전 1시간 공제 규정 삭제 등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근무수당 제도개선 건의(시 → 행안부) : '19.상반기
<p>○ 서울시 공무원직무발명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직무발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포상금 지급보다는 승진에 대한 가산 점수 부여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창의상 심사를 거쳐 실적가점 부여(사회혁신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부문(창의제안, 제안실행)에 대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 및 실적가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가점: 최우수 0.6점, 우수 0.4점, 장려 0.3점 - '18년 직무발명 서울창의상 수상실적 총 4건(우수2, 장려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3(우수2, 장려1), 하반기 1(장려1) 수상하였음 ○ 향후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 및 공무원의 직무발명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직무발명 설명회, 상담, 보상심의회, 후속간담회 등에서 포상금 및 서울창의상 실적가점 제도 등의 인센티브 안내 예정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공무원 직무발명 설명회 개최 : '19. 2월 ○ '19년 제1차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개최 : '19. 3월 ○ '19년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 반기별 1회 ○ 공무원 직무발명 상담 및 컨설팅 : 연중 상시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최근 서울시 본청 채무가 증가세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증가원인에 대한 대시민 설명이 필요함 (재정균형발전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중</p> <p><input type="checkbox"/> 지방채 증가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등 2조 3,667억원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8,600억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확충 등(3,290억원), 임대주택 공급(1,846억원) - 도시철도공채(7,951억원), 풍납토성 복원사업(442억원)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건전성과 확대 재정의 균형적 달성을 위한 서울시 채무 관리 계획 수립 예정 : '19. 2월 ○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지방채 발행 시 보도자료, 설명회 등을 통해서 대시민 설명 : '19. 8월
<p>○ 지방이양일괄법은 중복규제에 대한 부분이 많아 건수가 부풀려져 있고, 재정 및 권한에 대한 내용이 미비함. 서울시가 서울형 지방분권안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분권안을 개선하기 바람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수행이 적합한 사무 발굴 및 지방이양 지속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지역 현장간담회」 개최 및 자치분권위원회·행안부 등에 의견전달('18.11월) - 「'18년 제2회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개최('18.12월)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관련 이양사무 비용추계(자치분권위 주도)를 위한 서울시 비용조사표 제출('19.1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중심 이양사무 발굴을 위한 서울시 현장간담회 : '19.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산업경제, 도시계획 등) 이양사무 서울시 해당부서에서 발제 ○ 지방이양일괄법 원안가결을 위한 국회 공동방문 및 건의 : '19.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협·타 시도 등과 상임위 방문하여 이양사무 수용 필요성 설명 ○ 지방이양일괄법 이양사무 비용추계 학술용역 추진 : '19. 3~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양비용 및 행·재정적 지원방안 도출하여 정부 건의예정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인천시에서 어린이, 노인, 임산부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사물인터넷 적용해서 실내 공기질 측정하는 것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서울시의 경우는 어린이집이 130평 이하는 실내공기질 관리하는 의무사항이 없어 이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람 (보육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공기질 측정 사물인터넷(IoT) 시범사업 추진('19.9월) : 3개구(동대문, 도봉, 강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33개 어린이집(전체 어린이집 약 10%), 1,500여대 설치(개소당 2~3대) - 상시모니터링('나뽀' 등급 시 교사 휴대폰 알림) → 즉시 위해요인 저감조치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 자치구 추가 선정(1~2개구, '19. 3월) ○ 시범사업 운영결과 분석('19.9월) 이후, 전체 어린이집 확대(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측정기 인증 2등급 이상 제품으로 설치 ※ '19. 8월 간이측정기 인증제 시행
<p>○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대금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땅을 내놓은 기간이 오래되었는데도 매각되지 않고 있음. 서울시 재산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각이 곤란하면 민간에 임대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하여 검토함으로 재산 활용도를 높여 주기 바람 (추진 : 예산담당관, 협조 :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시에서는 부지 매각 시까지 시 산하기관인 서울의료원과 시에서 민간위탁 중인 기관에서 서울의료원 부지를 활용 중임 ○ 동남권 저소득 시민들의 최소한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과 장례식장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 사용가능한 건물은 최우선적으로 우리시 행정목적에 활용하고 있음(6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리어플러스센터(복지정책실), 청소년드림센터(평생교육국), 호텔후원물품 활용사업 창고(복지정책실), 박물관 수집자료 보관 창고(문화본부), 금천단기청소년쉼터(평생교육국), 강남구립어린이집(여성가족정책실) <p><input type="checkbox"/>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시까지 입주기관과 업무협의를 등을 통해 재산의 활용도 효율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겠음('19. 1월~) ○ 매각을 시도한 후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기와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각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건의사항	조치결과
<p>○ 현재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NGO를 통한 민간지원 부분에 치중되어 있음. 단순히 남북교류문제가 아니라 외교문제이며 주변국가와의 정세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정부기관과의 총체적인 협력 사업을 만들어 가야함. 남북교류협력추진단이 따로 조성된 만큼 인력구성에 있어서도 사업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준비하기 바람.</p> <p>(남북협력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지자체 남북교류를 선도하고 '서울-평양 도시협력'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협력추진단 신설('18.11.1.字)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구성 : 1단 2담당관 6팀 - 정 원 : 총 25명(현원 20명) ○ 남북관계가 대내외적 영향을 많이 받는 관계로 남북관계 전문가인 개방형 및 임기제 공무원 채용, 향후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적극적 사업 추진 ○ '19년 2월 신규직원 인사시 행정직 확충 및 임기제 충원(1명, 3월) 등을 통해 결원 확보 노력
<p>○ 민간위탁 수익창출형 사업 관련 실적이 제각각임. 적자가 나는 곳도 있는데 '수익창출형'이라고 사업을 하고 있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칭 및 정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기 바람.</p> <p>(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유형 명칭 및 정의 변경은 사회적 합의 필요사항으로 장기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계에서도 해당 유형의 민간위탁을 '위탁금 비지원형' 또는 '수익창출형'이라는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전문가 자문, 수탁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시민이해를 높일 수 있는 명칭 개선 추진 ※ '수익창출형 민간위탁' 명칭은 '12년부터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 사용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창출형 민간위탁 운영 개선방안 검토 : '19년 상반기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의 인사 교류 관련 아주 드물게 인사교류가 이뤄지고 있음. 활발한 인사교류를 통해 업무 협조와 사업추진의 혁신 등을 만들어야 함. (인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출연기관 소속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인사 교류를 진행할 수 없음 ○ 다만, 시에서 산하기관의 운영관리 강화를 위해 투출기관에 파견을 보내거나, 우수한 민간 전문가가 시책 추진에 협업할 수 있도록 투자출연기관으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고 있음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시-투자출연기관 파견현황 〉</p> <p>① 시 직원의 투출기관 파견현황('18.12.31기준) : 14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에너지공사(3명), 세종문화회관(1명), 서울디자인재단(2명), 120다산콜재단(2명) · 서울관광재단(2명),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1명), 서울기술연구원(3명) <p>② 민간전문가(투자출연기관)의 시 파견근무 현황 : 5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에너지공사, 서울관광재단,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 </div>
<p>○ 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경우 대부분 참석이 곤란할 것으로 생각됨. 실제 시장이 위원장으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정리가 필요해 보임. (민관협력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위원회 202개(2019.1월 기준) 중 시장이 단독 위원장인 위원회는 7%인 15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도 전수조사 결과 시장이 미참석한 위원회: 8개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이 위원장임에도 참석을 거의 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부시장 또는 소관 실·국장으로 변경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 하겠음

건의사항	조치결과																														
<p>○ 현재 시행중인 유연근무제가 서울시 3급 이상 고위직의 전유물로 비춰지고 있음. 유연근무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만큼 모든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힘써주기 바람. (인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근무 참여 현황 (단위 : 명) <table border="1" data-bbox="595 526 1430 750"> <thead> <tr> <th>직급</th> <th>2015년</th> <th>2016년</th> <th>2017년</th> <th>2018년</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1,986</td> <td>2,998</td> <td>3,194</td> <td>3,446</td> </tr> <tr> <td>3급이상</td> <td>15</td> <td>16</td> <td>49</td> <td>49</td> </tr> <tr> <td>4급</td> <td>66</td> <td>96</td> <td>135</td> <td>130</td> </tr> <tr> <td>5급</td> <td>314</td> <td>436</td> <td>504</td> <td>564</td> </tr> <tr> <td>6급이하</td> <td>678</td> <td>1,167</td> <td>1,186</td> <td>2703</td> </tr> </tbody> </table> <p>※ 유연근무 참여 현황은 '16년 29.6%→'17년 31.5%→'18년 33.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p>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노트북 대여 서비스 시행 : '19. 상반기 중 	직급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986	2,998	3,194	3,446	3급이상	15	16	49	49	4급	66	96	135	130	5급	314	436	504	564	6급이하	678	1,167	1,186	2703
직급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986	2,998	3,194	3,446																											
3급이상	15	16	49	49																											
4급	66	96	135	130																											
5급	314	436	504	564																											
6급이하	678	1,167	1,186	2703																											
<p>○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 채용이 늘어갈수록 비정규직도 늘어나고 있음. 충원계획에서부터 비정규직 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계획」(노동정책담당관-90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 채용 3대원칙(단기+예외+최소성) 적용→비율 최소화 - 비정규직 예산편성시 부서별 사용계획에 대한 사전심사제 운영 ○ 비정규직 채용원칙(단기,예외, 최소) 철저히행 권고(공기업담당관-2353)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시행 (2018.6.5., 노동정책담당관-58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지속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 원칙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관리감독 철저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서울디지털재단의 성과급 대상에서 비정규직이 제외되었음.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맞는지 확인해보고, 시정되어야 한다면 시정조치하기 바람. 또한, 기조실에 서는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자·출연 기관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급 지급현황 전수조사(전 출연기관) : '18.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개 기관 중 디지털재단을 제외한 14개 기관이 정규직 및 비정규직에게 성과급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근거 : '18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 '18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 준수 철저」통보(전 출연기관) : '18.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비정규직 포함), 기준 등 지급지침 재공지 ○ 디지털재단 비정규직 근무자 성과급 지급조치 : '18.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인원 : 10명 <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대상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교육 실시 : '19.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급 지급기준, 방법, 대상 등 세부내용 교육(평가 종료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도 교육 실시('18.10.4) 								
<p>○ 서울시 전 부서 중 특정부서가 1년 내내 4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음.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직원 개개인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 기획담당관, 협조: 조직담당관, 인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셋다운제 실시(금, 19:00) ○ 가정의 날 운영 : 주 2회(수, 금) 방송안내 운영 ○ 과로직원 초과근무시간 모니터링 관리('18. 5월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기준 : 월 100시간 또는 2월 연속 80시간 이상 - 과로대상 직원은 부서장 통보하여 업무조정 등 사후관리 ○ 조직문화 혁신 3대 분야 27개 과제 발굴 시행중 <table border="1" data-bbox="564 1458 1409 1928"> <thead> <tr> <th data-bbox="564 1458 667 1496">구분</th> <th data-bbox="667 1458 1409 1496">27개 신규 실행과제</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564 1496 667 1626">인사제도 개선 (8)</td> <td data-bbox="667 1496 1409 1626">1호: 5급 이상 관리자 직원 다면평가 확대 3호: 5급 이상 관리자 승진심사시 직원 참여 확대 10호: 신규직원대상 인사배치 및 업무분장 운영기준 마련) 27호: 근무성적평정 결과 전면 공개 등 8건</td> </tr> <tr> <td data-bbox="564 1626 667 1756">업무부담 완화 (11)</td> <td data-bbox="667 1626 1409 1756">4호: 시장요청사항 사전조정제도 운영 13호: 회의운영 및 보고방식 개선 14호: 퇴직공무원 역량을 활용한 민원부서 애로 처리 25호: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한 PC 셋다운제 실시 등 11건</td> </tr> <tr> <td data-bbox="564 1756 667 1928">직원사기 제고 (8)</td> <td data-bbox="667 1756 1409 1928">6호: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 강화 7호: 관리자 감성리더십 교육 강화 11호: 직무 및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한 전문 멘토 운영 12호: 신규 공무원 직무 조직적응 교육훈련 강화 17호: 직원이 편안한 사무환경 개선 확충 26호: 직원 건강관리의 체계적 지원 방안 마련 등 8건</td> </tr> </tbody> </table>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문화 혁신 실행과제 지속관리 및 신규과제 발굴 : '19년 1~12월 	구분	27개 신규 실행과제	인사제도 개선 (8)	1호: 5급 이상 관리자 직원 다면평가 확대 3호: 5급 이상 관리자 승진심사시 직원 참여 확대 10호: 신규직원대상 인사배치 및 업무분장 운영기준 마련) 27호: 근무성적평정 결과 전면 공개 등 8건	업무부담 완화 (11)	4호: 시장요청사항 사전조정제도 운영 13호: 회의운영 및 보고방식 개선 14호: 퇴직공무원 역량을 활용한 민원부서 애로 처리 25호: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한 PC 셋다운제 실시 등 11건	직원사기 제고 (8)	6호: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 강화 7호: 관리자 감성리더십 교육 강화 11호: 직무 및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한 전문 멘토 운영 12호: 신규 공무원 직무 조직적응 교육훈련 강화 17호: 직원이 편안한 사무환경 개선 확충 26호: 직원 건강관리의 체계적 지원 방안 마련 등 8건
구분	27개 신규 실행과제								
인사제도 개선 (8)	1호: 5급 이상 관리자 직원 다면평가 확대 3호: 5급 이상 관리자 승진심사시 직원 참여 확대 10호: 신규직원대상 인사배치 및 업무분장 운영기준 마련) 27호: 근무성적평정 결과 전면 공개 등 8건								
업무부담 완화 (11)	4호: 시장요청사항 사전조정제도 운영 13호: 회의운영 및 보고방식 개선 14호: 퇴직공무원 역량을 활용한 민원부서 애로 처리 25호: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한 PC 셋다운제 실시 등 11건								
직원사기 제고 (8)	6호: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 강화 7호: 관리자 감성리더십 교육 강화 11호: 직무 및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한 전문 멘토 운영 12호: 신규 공무원 직무 조직적응 교육훈련 강화 17호: 직원이 편안한 사무환경 개선 확충 26호: 직원 건강관리의 체계적 지원 방안 마련 등 8건								

건의사항	조치결과
<p>○ 마을변호사 사업 관련 매년 상담 실적이 늘어나고 있으나 마을변호사 1명당 월평균 1건의 상담을 하고 있음. 시민들의 요구에 비해 상담신청 절차와 실제 상담 약속을 정하기까지 번거롭고 어려운 경향이 있음. 보다 많은 시민들이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법률지원담당관)</p>	<p>□ 추진상황: 검토중</p> <p>□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변호사 사업을 자치구와 공동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주민센터 별 애로사항 청취: 2월~3월 - 동별 상담여건을 파악하고 상담환경 개선 지원 ○ 마을변호사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주변을 중심으로 지속 홍보: 관리사무소, 주민복지관, 생활편의 시설 등 - 지하철 역사 등 시민왕래가 많은 장소 집중홍보 - 인터넷(서울시 홈페이지)을 통한 자치구 정기상담일 및 상담동 주민센터 위치를 안내하여 주민편의 제공 ○ 마을변호사 운영 매뉴얼 제작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 안내, 접수방법, 상담예약 방식 등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인 지침으로 마련 - 동 주민센터, 자치구, 마을변호사에게 배포(2월중) <p>□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변호사 홍보물 제작, 배포 : 연중 수시 ○ 주기적 보도자료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실적 관리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최근 채용비리로 사회적 이슈가 된 서울교통공사 채용 관련, 서울교통공사가 처음 친인척관련 자료를 작성한 것은 내부적으로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 선의로 시작된 것이지만 비위사실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정황이 확인됨. 이에 대해 서울시의 확실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에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을 내놓은 안일한 서울시의 태도가 사건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상황에 1차적인 대응과 책임은 서울시교통공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와 사건이슈화가 서울시의 비정규직정규직화 기조를 흔들리는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사건 발생 후 신속한 상황판단과 적극적 대응 바람 (서울교통공사)</p>	<p>□ 추진상황 : 추진중</p> <p>□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보 및 왜곡보도에 대한 해·설명자료 배포 : 20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명자료 16건, 설명자료 4건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 19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매체 : 중앙일보(17건), 문화일보(2건) - 민사소송 제기 6건, 직권조정 2건, 조정 진행 11건 ○ 언론매체 취재 대응 <p>□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자 대면 접촉을 통한 공사 이해도 제고: 연중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진행: 1~2월 / 11건(중앙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기일 참석 : 1. 11.(금), 1. 15.(화), 1. 21.(월)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없이 법원 제소: 1월 / 4건(중앙일보)

건의사항	조치결과
<p>○ 민간차액보육료 지원관련 10월 5일 자치역량평가협의회 결과 시와 구 분담률 7:3으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이후 55:45 비율로 예산 반영됐으며, 더군다나 차액보육료 지원은 박원순 시장 공약사항인 만큼 이번 분담률 결정에 따른 자치구에서의 비용부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재정분담 문제로 구청과 시가 이견이 생기는 만큼 기초실세선의 적극적인 조정역할이 필요할 것이며, 시의 부담률을 올리는 선례에 대한 우려는 인정하나 보육료 지원만큼은 부담금액이 큰 액수라 할 수 없으며 정책의 무게감이 큰 만큼 현재 결정된 시와 자치구의 예산분담률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바, 2020년 시부담률 올리겠다는 계획보다 시기 앞당겨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 촉구(보육담당관)</p>	<p>□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 추진 경과 및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하반기 자치영향평가협의회 의견 제출 및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및 보육담당관 의견 : 시·구비 분담률 70:30 - 회의 결과: 시·구 분담률 70:30로 하되 시행시기 추후 결정 ○ 시 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시비 분담률 조정: 55%→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민간차액보육료' 예산에 70% 반영(시비보조사업) - 시비 분담률 변경 예산 내역 자치구 통보: '19.1.3.(목) <p>□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1월부터 부모부담 없도록 시·구 통합 지원 ○ '19년 민간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 1월 중 ○ '19년 수납한도액 기준 민간차액보육료 지원: '19. 3월~

건의사항	조치결과																
<p>○ 민간차액보육료, 고교 무상 급식 등 서울시는 현재 재정분담에 따른 자치구와 시의 이견이 발생하는 여러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시행에 있어 자치구의 재정 대책에 대한 논의시간도 주지 않고 시차원의 정책실시 발표만 있는 상황이 발생함. 모든 정책 시작 시 재정부담되는 주체들과 협의하고 긴밀한 논의로 결론에 도달해야하는 민주사회에서 서울시는 선발포 후논의로 논의중 빈번히 갈등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관련 규정 안맞으면 그제서야 시의회 협조를 구하는 뒤죽박죽식 정책시행절차에 대한 조속한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정책 진행 시 다급한 사업추진보다 긴밀한 논의와 협의를 통한 정책 추진 할 수 있도록 절차와 단계를 갖춘 시스템 마련하기 바람 (예산담당관, 기획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p>(자치구 협의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 보편적 복지확대에 따른 시 매칭비 증가, 자치구 법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p>< 최근 3년 사회복지 및 자치구 법정교부금 > (단위 : 억원, %)</p> <table border="1" data-bbox="593 728 1362 931"> <thead> <tr> <th>구분</th> <th>'17최종예산</th> <th>'18최종예산</th> <th>'19당초예산</th> </tr> </thead> <tbody> <tr> <td>시예산</td> <td>319,818</td> <td>357,817</td> <td>357,416</td> </tr> <tr> <td>사회복지 (점유비)</td> <td>90,014 (28.1)</td> <td>100,017 (28.0)</td> <td>111,574 (31.2)</td> </tr> <tr> <td>자치구교부금 (점유비)</td> <td>46,451 (14.5)</td> <td>49,841 (13.9)</td> <td>45,955 (12.9)</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분담금 등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새로운 정책사업 시행 시에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에는 건의사항에 대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와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하겠음 <p>(시의회 협의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기획조정실에서는 예산 편성, 민간위탁 추진 등 시의회의 사전 동의·보고가 필요한 현안업무 추진시에는 반드시 사전 절차를 준수하도록 수시로 안내하고 있음 ○ 아울러, 매 회기 전 의장단·대표의원·상임위원장단 조찬 간담회 및 교섭단체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시 주요 정책을 미리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정책사업 시행시에는 자치구 재정부담(분담금)을 고려하여 자치구 부구청장회의, 관련부서 회의 등을 통해 자치구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19. 1월~) ○ 시의회 동의·보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사전 절차를 거치도록 부서 안내(1월, 3월, 5월, 7월, 10월) ○ 의장단·대표의원·상임위원장단 조찬 간담회 및 당정협의회 개최(2월, 4월, 6월, 8월, 11월) 	구분	'17최종예산	'18최종예산	'19당초예산	시예산	319,818	357,817	357,416	사회복지 (점유비)	90,014 (28.1)	100,017 (28.0)	111,574 (31.2)	자치구교부금 (점유비)	46,451 (14.5)	49,841 (13.9)	45,955 (12.9)
구분	'17최종예산	'18최종예산	'19당초예산														
시예산	319,818	357,817	357,416														
사회복지 (점유비)	90,014 (28.1)	100,017 (28.0)	111,574 (31.2)														
자치구교부금 (점유비)	46,451 (14.5)	49,841 (13.9)	45,955 (12.9)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관련 공공영역에서 수익구조를 만들고, 이윤창출 등 한계가 있는 만큼 사업 확장과 개발을 위해 구조적 한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외교 및 정책수출 추진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조직 확대·개편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외교, 정책수출 전담조직 관련 재단 설립 타당성 등 - (사)한국행정학회 수행('18.5~9월, 4,750만원)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협의 등 재단 설립 추진 : '19.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수출 추진체계 확대개편 및 시행
<p>○ 서울시 소청심사위원회 소청 인용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음.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역할 및 기능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높은 인용률은 반성이 필요한 당사자들에게 징계회피 기회를 주는 것으로 비취질 수 있는 만큼 소청심사위원회가 면피용 단계로 둔갑되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 바람 (법무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서 공정성을 위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판·검사 경력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음 ○ 위원회 운영 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여 심리하고 있으며 향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유급병가 제도 등)정책 시행시 사전 절차를 전부 거치고 시민들에게 발표되어야 하는데, 의원발의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행태는 소수당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됨. 향후 중요 시책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소통하고 이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기획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발의 주요 조례 제·개정안의 경우 전문위원실 및 대표발의 의원님이 다른 의원님께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 집행부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님들과의 사전 보고 등을 통해 의원님들과 소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이 사전에 각 상임위 의원님들께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의사담당관과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과 협의 추진('19. 상반기)
<p>○ 특별조정교부금 상황을 보았는데 2,230억임 10%가 시·구 공동사업이고 90%가 자치구 사업임. 구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됨. 특히 자립도가 비슷해도 구별 차이가 많은 것은 이해할 수 없음. 형평성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자치행정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교부금은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으로 교부 시 기본적으로 區 재정여건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구별 교부액에 차이가 발생 ○ 재정 및 사업 여건 변동, 예기치 못한 사유로 등으로 발생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성격상 동일한 자치구에 교부되는 특별교부금도 매년 상이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교부금은 일반교부금 산정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보완적·탄력적 성격을 가진 재원으로 자치구간 교부액의 편차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으나, ○ 신청사업의 타당성 검토 후 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교부금을 자치구간 형평성 있게 배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TF중심 조직문화 전문가 6명 명단 및 프로필 (기획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 11. 7.)
○ 시범사업 공공기관 생리대 비치 현황 - 공공기관, 배치 및 소진 현황 등 (평가협업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 11. 7.)
○ 격무부서 구분을 위해 2018년 월별, 일자별, 직급별 자료 요청 (인사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 11. 7.)
○ 2018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총괄 (기획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 11. 7.)
○ 출자출연금 의회승인 요청 3년 치 자료 요약 제출 (공기업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 11. 7.)
○ 10억 이상 자체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내용 (시민참여예산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 11. 7.)
○ 자치구별 직원의 남녀 현황 (자치행정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 11. 7.)
○ 시민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3년간) (시민참여예산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 11. 7.)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지방이양일괄법에 관한 건의, 요구사항 제출 (조직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 11. 7.)
○ 먹거리 자문관 실제 급여 지급 내역 제출 (기획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 11. 16.)
○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확대 관련 지적사항 관련 자료 (조직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 11. 7.)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결과 (세부적으로) (조직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 11. 7.)
○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관련 - 동별, 월별, 상담건수 (법률지원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 11. 7.)
○ 차별적 보조비율(128개사업) 1조 320억 관련 자료 제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 11. 7.)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기관장 평가 에 관한 더 세부적인 내용 - 세부금액, 인원 등 (공기업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 11. 7.)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p>○ 전체 투자출연기관의 2019년 신규채용 목표치가 1,200명에 불과한지? - 2019년 신규채용 목표치 산출 근거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 11. 7.)</p>
<p>○ BSC 좋은 일자리 만들기 목표 설정 기준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 11. 7.)</p>
<p>○ 정규직 비정규직 성과급 현황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 11. 7.)</p>
<p>○ 수익창출형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내용 제출 (창출 내역 등)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 11. 7.)</p>
<p>○ 민간보조사업 부정수급 등으로 환수금액이 발생했을 경우 징수 진행상황 보고 (재정균형발전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 11. 7.)</p>
<p>○ 민간위탁 부정수급 등으로 환수금액이 발생했을 경우 징수 진행상황 보고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 11. 7.)</p>
<p>○ 직급별 남녀 성비 3년치 유연 근무 참여율 (인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 11. 7.)</p>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2018년 예산 편성 관련 지침 (예산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 11. 7.)
○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인용된 경우 에 한하여 직급별 현황 (법무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 11. 7.)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건 수가 많아 유동적으로 조종할 수 있게 조례 제정 후 국감에 서 상위법 위반이라는 지적사 항에 대한 자문 내용 - 상위법 위반 관련 자문 받은 자료 제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 11. 7.)
○ 3년간 공무원소청심사 인용 건 (법무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 11. 7.)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명단, 교육이수과정, 선발과정 (시민참여예산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 11. 7.)
○ 투자출연기관 23곳의 당연직 비상임이사 명단 (공기업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 11. 7.)
○ 2018년 현재까지 시민참여예산 사업별 집행률 (시민참여예산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8. 11. 7.)